

월간 경실련

통권 168호 | 2019 03 04 호



재벌 개혁! 부동산 개혁!

30주년을 바라보다
임현진 前공동대표 인터뷰

특집 대담: 재벌과 부동산 개혁
박상인 · 김헌동 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우리들이야기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前집행위원장

재벌은 안 망한다?
개혁해야 할

부동산 사면 본변다?



커버스토리

재벌과 부동산은 30년 전 경실련이 창립될 때부터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재벌은 안 망한다', '부동산 사면 돈 번다'는 두 가지 신화를 깨야 우리 사회가 틀을 바꾸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재벌 개혁! 부동산 개혁!



CONTENTS

동승동 칼럼

06 민심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올들의 반란 / 윤순철

30주년 특집

08 ① 경실련이 묻다! 임현진 前공동대표 인터뷰 / 윤은주

13 ② 월간 경실련 30년 역사(2)

16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특집대담: 재벌과 부동산 개혁!!

21 박상인·김현동 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 윤은주

2019 재벌개혁

29 ①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51조 증가 / 김건희

32 ② 재벌갑질을 알리오! 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인터뷰 / 윤은주

2019 부동산개혁

38 ① 공시지가 제도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는 더 낮아졌다 / 김성달

42 ② 땅과 집 QnA - 공시지가가 대체 뭐야 / 장성현



08 30주년을 바라보다
임현진 前공동대표 인터뷰



21 특집대담:
재벌과 부동산 개혁!
박상인/김현동 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중앙위원회의장 이의령 상임집행위원장 채원호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발행 2019년 3월 22일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omepage : http://www.ccej.or.kr

시사포커스

- 46 ① 언제까지 원주민 내쫓는 재개발사업 방지할 것인가 / 남은경
- 48 ②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 서희원
- 53 ③ 제주영리병원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최예지
- 56 ④ 다시, 문제는 신뢰다 / 김일한

지역이야기

- 58 품짝 매! 삼성!! - 구미경실련과 Channel NewsAsia와의 인터뷰 / 정호철

우리들이야기

- 61 ① 반갑습니다! 신입회원 인사드립니다!! / 정준영
- 63 ② 중앙위원회 현장스케치 -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전국경실련 동지들!" / 윤은주
- 66 ③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집행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 73 ④ 문화산책 -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 조성훈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 75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 76 경실련 일일보고
- 80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61 반갑습니다!
신입회원 인사드립니다!!
정준영 신입회원



66 우리들 이야기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집행위원장 인터뷰

민심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을들의 반란




국민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제도로 권력을 교체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2017년 ‘이게 나라냐’며 민심으로 권력을 교체시킨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시민들은 자부심을 갖는다. 촛불 시위로 행정부의 대통령은 탄핵으로 교체되었고, 사법부의 수장은 여러 위법 행위가 드러나 구속되었다. 입법부만 온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역사 왜곡과 막말을 듣고 있으면 최소한의 인격도 품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의를 모아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국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리인으로 보기에 민망하다.

촛불시위 이후 시민들의 인식과 행위는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리인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정치행위자가 되려는 주권의식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발전된 주권의식을 제도화하는 요구가 정치제도 개혁과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회는 시민들의 주권의식을 반영할 개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는 2017년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2019년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정 시한도 지킬 수 없는 상태이다. 유권자가 겁이라면 국회의원들은 을인데, 을들의 반란이다.

최근 정치제도 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2020년 총선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더 반영되는 개혁을 요구해왔고 수차례 국회의원과 정당들에 면담이나 기자회견 등으로 전달하였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리하면, 2020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공천 30% 의무화, 표현의 자유 확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국회의원 세비 삭감,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국회의원 세비 산정, 국회의원 직무상 국회의활동에 대한 독립기구의 사

전 심사, 국회의원 징계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 국회 모든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딴청만 피웠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당이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을 묻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했다. 국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개별적 답변’을 금지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차단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일부 의원들은 이미 답변한 설문지를 돌려달라는 촌극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 270명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많아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정당들의 공천문제는 비례대표에만 국한되지 않음에도 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나타난 문제를 폐지로 정리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의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파기하고, 민심에 따라 의원 정수를 배분하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다문화가정 등 소수자의 의견이 정치에 더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한편 국회와 시민사회의 갈등과 별개로 정당 간의 논쟁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을 합의하고 국회 법상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뒤늦게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합의한 개혁방안이 각 정당의 의총을 통과하고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는 공직자비리 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가로 정당들이 합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개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 정치이고, 정치의 힘은 민의에서 나온다. 국민들이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성과 소수정당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여 현재보다 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에 반대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정당들이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갖는 냉소와 불신에 의존해 개혁을 거부하면서 기득권만 챙기려한다면 더 큰 심판을 맞을 것이다. 정치권은 주권재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터뷰]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비판적 협력관계입니다.
거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죠”

(임현진 前공동대표)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dongi78@ccej.or.kr



▲ 지난 3월 13일 본인이 사회대 확장시절 창립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임현진 前공동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30주년을 맞아 작년부터 시작한 기념 인터뷰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호에서 일곱 번째 경실련이 만난 분은 임현진 전 공동대표입니다. 임현진 대표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경실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학자로서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하셨고, 경실련뿐 아니라 한국NGO학회를 이끌며 다양한 시민단체 영역에서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Q. 1989년 발기인으로도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경실련 운동을 하게 되셨는지와 창립 당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A. 1988년부터 서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당시 경실련이란 시민단체를 창립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동참하고 싶다는 말씀이 많았어요.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도 공공부문보다 회사원, 은행원, 교사 등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선후배, 동료 교수들과 우리 사회에 경제정의와 사회개혁을 위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영국의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처럼, 개량주의라 하더라도 우리는 혁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개혁을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만들고 지키자는 얘기를 나눴었지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청와대 정책수석 역임)하고 양건 교수(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역임) 이런 분들과 같이 경실련은 사회운동에 끝까지 매진해야지 이걸 디딤돌로 해서 정치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요. 그러나 이 신조가 개혁을 위한 정치참여, 현실참여라는 명분 아래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시작한 분들 중에서 성공

한 분이 거의 없어요. 시민운동가는 본연의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Q. 세월호 참사 직후에 한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우리 사회는 ‘4불(不)’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통, 불신, 불만, 불안이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A. 세월호 이후에도 그런 ‘4불’이 없어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촛불 이후 형식적으로는 의견 개선이나 공론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방정부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협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는 협치라는 말만 떠들었지 민의를 대변하고 있진 못하고, 완전히 정파 이해에 빠져 나라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나가고 촛불은 촛불대로 갈라져 있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신뢰도 회복이 안 되고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민생은 힘들고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이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 미세먼지 대책만 봐도 정부가 뭐냐? 국가가 뭐냐? 촛불 때와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사드 때처럼 중국 눈치만 보고 중국에 할 말을 못해요. 특히 어린이들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

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를 단기와 장기로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촛불 이후 시민단체를 편하게만 바라보고 있고, 야당은 다 자기의 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아요. 여·야당이 시민단체를 네 편, 내 편으로 보는 단견을 버려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항상 비판적 협력관계로 거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한국NGO학회 활동을 이끌기도 하시고, 경실련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도 활발히 해오셨는데 한국 NGO의 시작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출발은 19세기 말 만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 정신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은 사회운동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국민이 살아나는 마치 촛불에서 시민이 살아났듯이 국민이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이니까 굉장히 큰 의미죠.

일제 강점기에는 홍사단, YMCA, YWCA 이런 단체들이 1세대 NGO라고 볼 수 있어요. 2세대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을 구분해야 하는데 신사회운동은 주로 기존의 노동운동, 계급운동이 아니라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등을 말하는데 NGO를 좁혀서 얘기한다면 경실련이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경실련 창립 30주년일 뿐 아니라 NGO 창립 30주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Q. 한국 NGO의 한계로 높은 정부 의존도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현재 NGO가 마주한 가장 큰 한계이며 도전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정부 프로젝트를 대행하는 소위 에이전트(Agent)로 전락하는 것이 문제예요. 과거 정책 비판자, 대안자, 경쟁자로서의 지위가 단순한 정책을 수행하는 지위로 전락한 것이죠.



누가 정책을 견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나 기업의 인·물적 자원과 역량의 측면과 비교해볼 때 시민단체가 결코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한 단체가 모두 다루려하지 말고 경제정의, 산림, 물, 미세먼지, 원자력발전, 농촌이주노동자, 한국산 콩 두유 등 조금 더 전문영역에서 탐사와 혁신이 결합된 대안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와 같은 운동방식으로 당위적인 주장만 하다 보면 정책경쟁에서 늘 밀리게 되고, 소위 '10급' 공무원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극복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재정 문제인데, 국제 NGO 같은 경우 그린피스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의 단체를 보면 회비 비중이 1/3이고, 더 많은 비중이 재단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서너 개의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환경단체 후원하자' '인권단체 후원하자'라고 하면서 내는 거죠. 빌 게이츠가 자기 주식을 팔아서 개인 돈으로 내는 거지, 회사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기업주가 기업의 돈을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 번 돈을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Q. NGO 활동가 또는 NGO 활동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 조언과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시민사회 활동 분야는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는 희망 직장의 블루오션이 결코 아니에요. 10년 전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외교 역할과 국제활동 역량 등을 강조하며 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어요.

NGO는 가치지향 조직이에요.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통해 체득돼야 해요. 단순히 세계시민교육을 받았다고 세계시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지방, 국가, 지역, 세계 구석 구석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우선 생겨야 합니다. 듣는 훈련이 되고 공감 능력이 커지면 보다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기획하게 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죠.

공공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 이를 위해 공유, 연대, 협력의 가치를 키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치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희망이 있어요. NGO가 이런 일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해요.

Q. 끝으로 올해 30주년을 맞는 경실련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A. 우리 경실련은 큰 의미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종합시민단체라는 어쩔 수 없는 큰 짐을 짊어져 왔는데, 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한 군데 모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 역량의 한계에 부딪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시민들이 경실련을 많이 찾아왔는데 요즘은 아마 덜 찾아 올 거예요. 과거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자기의사를 대변했는

데 촛불 이후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SNS 통해서 직접 다 표현해요. 전문가들도 과거에는 정책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도움을 줬는데 요즘은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집합적인 문제의식이 없어져요. 시민단체들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했어요. 시민들의 힘은 커졌는데 회원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은 살아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거꾸로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들을 경실련이 다른 NGO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활로를 뚫어갈지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월간 경실련 30년 역사 (2)

(1995~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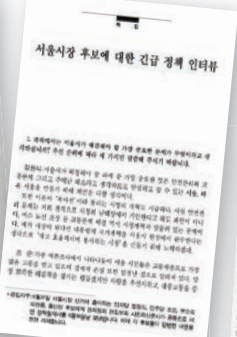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1995년~1996년 경제정의와 월간 경실련 1997년~1999년호까지에서 몇 컷 소개합니다. 경제정의는 1996년까지 발행됐고, 1997년부터는 월간 경실련으로 새롭게 창간돼 지금까지 이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1995년 봄호 표지 - 올해 문재인 정부 2년 평가하는데, 특집이 김영삼 정부 2년 평가 좌담이네요



1995년 여름호 - 후보자가 정원식, 조순, 박찬중, 황상성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 분들을 알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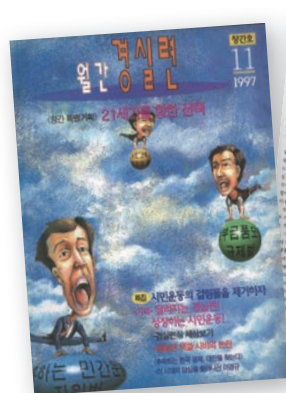
1995년 겨울호 - "24년 전에도 어찌 이리 똑같을까" 표피 현실화와 재벌 개혁 자료들

1996년



1996년 가을호 표지 - 1997년 창립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밑거름이 됐던 제2차 유엔주거회의(Habitat II) 기사가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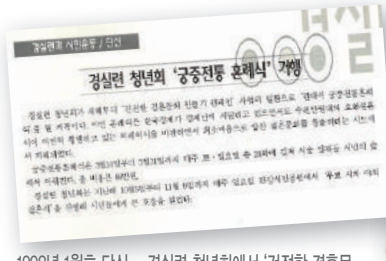
1997년



1997년 11월 월간 경실련 창간호 표지

1997년 11월호 경실련이 보험사업도 했었네요!;

1998년



1998년 1월호 단신 - 경실련 청년회에서 '건전한 결혼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했었네요



1998년 2~3월호 - 지금은 없어진 부천경실련 기사



1998년 5월호 - 경실련이 생협도!!



1998년 5월호 -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예산감시신고센터도 운영했었네요



1998년 8월호 - 20년 전 간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불까요?



1998년 11월호 - 당시 시민들은 IMF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1999년



1999년 5~6월호 표지



1999년 7월호 - 창립 10주년 기념 사진들



1999년 8~9월호 - 도시 곳곳 숨겨진 곳을 찾아 소개하기도 했어요



1999년 11~12월호 표지 - 경실련 출범 10년이 되는 해였네요

역사 속 그날 이야기 (1989~1993년)

● 1989년



7월 8일 : 발기인 대회
명동 YMCA 강당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갖다.



11월 4일
서강대 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모여 "제1차 토지공개념 입법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다.

● 1990년



4월 23일
경실련 세입자 협의회 주최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희생 세입자 합동 추모식'을 거행하다.



6월 20일
경실련 정기간행물 '경제정의' 창간호 발간 기념식



6월 9일
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 공식출범하다.



● 1991년



2월 23일
파고다공원에서 '수서사건 재수사 촉구 및 정경유착과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다.



6월 15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로 '공명선거실천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광역의회 선거참여 캠페인을 열다.



10월 2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망국적인 호화사치품 수입반대 시민대회'를 열다.



12월 11일
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제1회 경제정의 기업상 시상식'을 갖다.

● 1992년



3월 20일
'4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다.



7월 18일
'정보시망 부정 선거진상규명 및 금융실명제 실시 촉구 시민대회'를 열다.



9월 26일
14대 대선을 맞아 '경제개혁과 민주발전을 위한 정책캠페인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다.



11월 28일
'3당 정책공약 비교평가 세미나'를 개최하다.

● 1993년



3월 22일
24개 단체와 공동으로 '우리쌀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를 창립하다.



6월 16일
한의대생 유급사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다.



8월 12일
'금용실명제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 성명서를 발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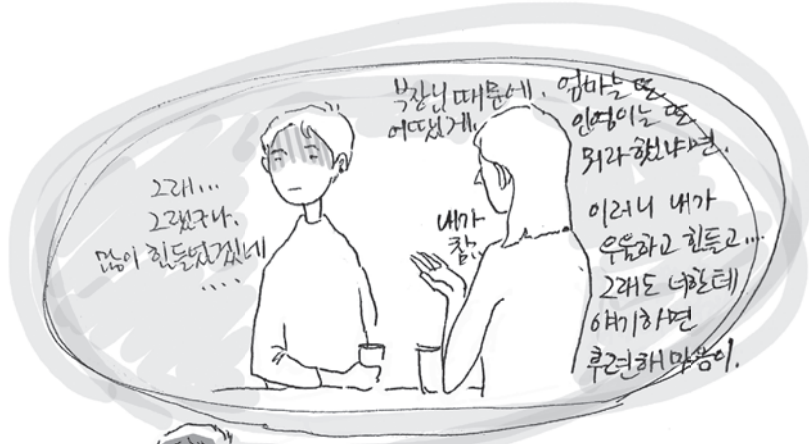


9월 7일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던 이문옥 감사관 1심 무죄판결 축하



시사저널 208호(1993년 10월 21일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기사

뺨때수니



Empath: A person who is capable of feeling the emotions of others despite the fact that they themselves are not going through the same situation. (출처: urbandictionary)

Empath라는 말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잘 공감하는 성향이라, 에너지 뱀파이어 (energy vampire)에게 감정적으로 흡사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Empath라며 피해의식을 갖다가 문득, 그 피해의식으로 누군가의 에너지를 또 뺏은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경실련과 함께 걷는 길

[회원가입] (FAX) 02-741-8565 (e-mail) member@ccej.or.kr
 [전화문의] 회원팀 02-766-5627

회원정보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단체 및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원하시면 주민번호 기재)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가입동기

- 추천 (추천인:)
 토론회, 행사 (행사명:)
 인터넷, SNS 기타 ()

회비납부 방식

(CMS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택1)

<input type="checkbox"/> CMS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예금주	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 불가)	카드번호		
출금은행	유효기간	월/	년(숫자4자리)
생년월일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월납부금액			
개인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법인 (매월)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일시)	<input type="checkbox"/> 60만원	<input type="checkbox"/> 12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회비 수납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자필 필수)

증액 신청서

경실련 회원님, 회비를 증액해 주세요!

이름	소속
회비증액 현 회비에서 ()원	()원 증액합니다.
정보개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연락처	
E-mail	
주소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20 년 월 일

재벌과 부동산 개혁!!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는 친재벌 정권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올해 우리 사회 불평등한 현실 들춰내 개혁할 것!”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dongi78@ccej.or.kr



▲ 지난 3월 14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담자

- ▶ 박상인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 ▷ 김현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윤순철 사무총장

■ **윤순철:** 경실련 운동을 하며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올해는 재벌과 부동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벌과 부동산은 경실련이 창립될 때부터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신화가 있어요. '재벌은 안 망한다'와 '부동산을 사면 돈 번다'는 거예요. 이 신화를 깨야 한국사회가 틀을 바꾸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경실련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는 파이터들이신데 한 자리에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촛불 이후 현 정권이 탄생했는데 현 정부의 재벌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주시지요.

정부, 법 핑계대고 아무 것도 안 해

▶ **박상인:** 재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현 정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벌문제는 크게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고,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97년 경제위기 때도 봤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죠. 황제경영이 일어나고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계열사 간에 M&A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

지가 지금까지 재벌문제를 다루고 재벌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 산업차원 또는 시장차원의 문제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상황이 산업의 진화를 방해해 한국경제 제조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출자규제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평가하자면 한 마디로 한 게 없다,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다고 입법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 개정이라고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모두 재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영양가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출자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야 하는데, 이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지분율 규제강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공약도 아주 약했는데 그 공약 자체를 아예 안 담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경제력 집중의 문제, 출자구조의 문제를 푸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경영을 막는 현재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지배주주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 Rule)예요. 법 개정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상장규칙을 바꾸면 돼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간 일감몰아주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 수준이나 행정 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안하면서 계속 법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 김현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집값이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들이 투기를 시작한 이유를 보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50조 원을 5년 동안 매년 10조 원씩 쏟아 부어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거였어요. 연이어 서울시장은 2018년 “여의도와 용산을 통개발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서울

집값이 한 달 동안 100조 원, 서울 부동산값이 600조 원,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원이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1,00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국민들 1년 저축액은 50조 원도 안될 텐데...

소득주도성장을 한 게 아니고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한 거죠. 그 1,000조 원을 누가 가져갔겠어요? 40%는 재벌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얼마를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재벌은 수만 평, 수십만 평, 수 억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2007년 약 25조 원에서 지난 10년 75조 원으



▲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로 약 3배, 장부가격 50조 원 규모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이제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2019년 초반부터 예타 면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24조 원의 사업을 전국에 국민세금을 쏟아 붓든지 재벌자금을 끌어다가 민자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겠다고 해요.

■ **윤순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해외출장 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재벌을 사랑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고를 확인해보니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보면 현 정부 재벌정책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재벌개혁에 대해서 주저하는지, 왜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인:**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을 사랑한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는 그 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릴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심을 고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이 경제정책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좀 과장되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김상조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들하고 그다지 인연이 없어요. 정권 핵심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코드에 맞춰 마치 재벌개혁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채택됐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위에 있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경제인식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지도부나 자한당의 지도부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25 이후 60-70년대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잘 살게 된 건 재벌체제 덕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재벌개혁을 왜 해야 하지? 재벌개혁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소중한 자산인데 그게 망하면 어떻게 되지? 국회의원 시절이나 정치인 시절에 끝없이 재벌의 로비스트들에게서 주입

받은 과거의 경험과 교육이 이 분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 **윤순철**: 2007년 자료를 다시 뒤져보니까 2007년에 전경련이 정책 규제개혁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무총리께서 요청해 정부에 등록돼 있는 규제 5,300개를 추려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학자들이 다 모인 앞에서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건의했는데 대체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들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그때 제안대로 다 났습니다.

▷ **김헌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법제도가 재벌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2017년 12



▲ 윤순철 사무총장

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 밤 12시를 넘겨서 새벽 2시까지 법안 120개가 통과됐어요. 무슨 중요한 법안 이기에 심야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나, 이 법안 들을 분석해보니까 80%가 다 재벌을 위한 법 안이에요. 재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한 법안 이고, 시민이나 중소기업에 관한 법안은 20% 도 안 돼요. 재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 히 공무원들이나 이익단체를 통해 국회의원 들 개인에게 통과되기 쉽게 설명서에 외국 사 례까지 모든 걸 조사하고 첨부해 법안이 통과 되기 쉽도록 로비까지 하는데, 서민이나 약자 편에서는 법안을 만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개 정안을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더 기울어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 **박상인**: 2007년 규제개혁을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죠. 그때 재벌 관련 규제들을 대부분 완화시켰어요.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출중제의 사실상 폐지입니다. 완전히 폐지된 건 이명박 정부였지만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지주회사 출자 단계 규제를 한 단계 늘려줘요. 2007년 이후로 재벌 계열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야말로 가장 친재벌 정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친재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

해서라도 친재벌적인 정책을 막는 역할을 해 줬지만 여당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인 친재벌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 차등의결권 도입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더 영광스럽게 노무현 정권의 친재벌 정권 타이틀을 떼와 역사상 가장 친재벌 정권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 김현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무능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

■ **윤순철**: 예전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했던 논리가 아마추어라는 거였어요. 그

전 진보세력들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추어라고 했던 말이죠. 최근 문재인 정부를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제는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건 관료를 잘 활용하는 건데, 전체 큰 틀을 짜는 관료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현동: 한 가지 예만 들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할 때는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할 것처럼 취임사를 했었어요.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분양원가공개할 거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공공만 분양원가 시행령 하나 고치는 데 2년 걸렸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니까 8년 동안 공개하지 않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그 말을 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소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분양원가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소송을 할 것이고, 경기도도 경기도시공사에게 하청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안하고 있어서 공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현황 등의 정보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든 금융위든, 국토위든, 국세청이든,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이 무능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 경실련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인: 제가 내린 결론은 무능보다는 무관심이다. 그리고 ‘무관심해서 무능하다’입니다.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정책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선거와 정치에만 관심 있고, 경제는 선거와 정치에게 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아이디어가 남북관계는 정권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는 정권의 부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산은 키우고 부채는 관리해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는 게 기본 취지 같아요. 또 하나, 이분들이 정말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가 정말 별로 안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나빠진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재벌개혁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할 의지도 없고 정치적으로 해 봤자 ‘다음 정권이 덕 보는 걸 왜 욕은 내가 듣고 하느냐’라는 정치 이해타산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니라면 제발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윤순철: 마지막으로 경실련이 재벌과 부동산개혁 두 군데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반 회원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공시지가 올라가면 내 세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부터 재벌을 욕하면서도 ‘내 자식은 삼성에 취

직해야 되는데'하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 **박상인:**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그때 저는 이 재벌중심 관료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체제가 지속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내버려두면 한국경제나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 같으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루 아침에 재벌을 해체하고 모두 뒤엎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으로써 타임라인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혁을 실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제조업 위기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구조와 정책기조로는 안 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바뀌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왜 자기는 어렵게 삼성에 들어갔는데 회사 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과 재벌, 재벌총수를 헛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벌총수는 재벌이고 재벌은 기업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재벌총수와 재벌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 기업을 욕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욕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비약이라고요.

지금 이 구조에서 대기업에 가려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욕할 일도 아니고요. 삼성에 입사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삼성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고, 이 구조를 바꿨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득이 되는 것이므로 회원과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동:** 우선 재벌이나 기득권층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이 뭔지 알려주자는 겁니다. 왜 재벌은 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줘야 되는지, 재벌은 왜 공공택지에 알짜 땅을 싸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특혜를 우리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등과 불공평한 것을 밝혀내고 그 특혜로 또는 불로소득으로 얻은 게 얼만지 사실을 밝혀내서 그런 것을 없애고 똑같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이런 방식의 시민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런 특혜와 특권을 계속 누리게 만들자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설득할 수 없는 거죠.

■ **윤순철:**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았고, 큰 틀에서 중요한 우리 사회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주력할 텐데 많은 힘든 과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 위원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51조 증가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현재 집권 2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 기초가 되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공정경제 정책은 등한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벌의 숙원사업이었던 은산분리 완화나 차등의결권 도입 등의 규제완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몰락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는 우월한 지위와 정보력, 자금 동원력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과세 기준을 통해 세금 특혜를 받고 토지수용권한 등의 특권까지 보장받아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몸집 불리기에 이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의 토지 보유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이렇게 재벌들이 토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불로소득 획득을 위해 토지를 사들여 왔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5대 재벌 토지소유현

황을 조사하여 지난 2월 26일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가장 높은 5개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토지와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위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료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상위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장부가액 기준) 23.9조 원에서 75.4조 원으로 51.5조 원이 증가하였다. 2007년도까지의 토지자산은 약 24조 원이었으나 10년간 51조 원을 취득해 3.2배가 증가한 것이다. 2017년 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 18.1조 원, 삼성 16.2조 원, 에스케이 10.2조 원, 엘지 6.3조 원 순이었다. 2007년도에는 삼성이 보유 토지 7.7조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도에는 현대차가 24.7조 원으로 1위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분은 현대차가 19.4조 원으

〈표〉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 장부가액

(단위:조 원)

그룹	2007년	2012년	2017년	증가액 ¹⁾	증가배수 ²⁾
현대차	5.3	12.8	24.7	19.4	4.7
롯데	6.2	9	18.1	11.9	2.9
삼성	7.7	11.6	16.1	8.4	2.1
SK	3.1	6.4	10.2	7.1	3.3
LG	1.5	4.4	6.3	4.8	4.2
계	23.9	44.3	75.4	51.5	3.2

1) (2017년도 토지가액) - (2007년도 토지가액)

2) (2017년도 토지가액) ÷ (2007년도 토지가액)

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롯데 11.9조 원, 삼성 8.4조 원, 에스케이 7.1조 원, 엘지 4.8조 원 순이었다. 증가배수는 현대차가 4.7배였고 엘지 4.2배, 에스케이 3.3배, 롯데 2.9배, 삼성 2.1배 순이었다. 특히 현대차와 엘지는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도 기준 5대 재벌 전체 계열사 369개 중 토지 보유 상위 5개사는 현대자동차(10.6조 원), 삼성전자(7.8조 원), 롯데쇼핑(7.2조 원), 기아자동차(4.7조 원), 호텔롯데(4.4조 원) 순이다. 또한 2017년도 5대 재벌 전체 계열사 중 토지보유금액 상위 50위 기업은 총 70.1조 원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369개 기업이 가진 토지인 75.4조 원의 93%를 차지했다.

작년 하반기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17년도 보유한 토지금액

이 가장 많은 10개 법인의 토지는 5억 7천만 평 규모로, 공시지가 38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보유 토지 면적 기준 상위 10개 법인의 토지는 10년간 1억 평에서 5.7억 평으로 4.7억 평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283조 원이 늘었다. 상위 50개 법인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2007년 173조 원(3억2천만 평)에서 2017년 548조 원(11억 평)으로 375조 원(6.8억 평)이 증가했다.

국세청 자료의 기업명은 비공개로 되어 있으나 5대 재벌의 계열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토지자산인 48조 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 385조 원을 비교하면, 국세청 자료의 12%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위 50개 기업의 보유 토지 장부가액은 70조 원이지만 국세청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 548조 원으로, 이를 시

세로 환산하면 1천 조 원 대로 추정된다.


이처럼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재무제표 상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 차이가 8배 정도 존재하며, 실제 시세와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이 공개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투명경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항목도 포함했는데, 투자부동산이란 기업 또는 법인이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2017년도 기준 5대 재벌 전체가 소유한 투자부동산은 12.9조 원이며 삼성이 5.6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3.9조 원, 엘지 1.6조 원, 현대차 1.4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재벌의 토지와 투자부동산을 합한 금액은 약 88조 원이며, 합계금액은 현대차가 26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22조 원, 삼성 21.8조 원 등의 순이었다.

국내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이번 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재벌들이 토지 사재기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10년간 주력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 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

익 등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많은 이익을 얻어 땅 사모으기와 부동산 투기에 집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노태우,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와 강제 매각, 여신운용규정 제한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으나, 당시의 규제는 2000년, 2007년을 거치며 무력화되었다.

재벌들이 주력사업의 본질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해 최근 10년간 아파트값 및 부동산 거품이 상승하고, 임대료 상향으로까지 이어져 중소기업들까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땅, 집 등과 같은 공공재 및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재벌들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투명하게 재무상태를 공시하고, 재벌의 부동산 투기 및 땅을 이용한 세습 등이 시장에서 감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건별 주소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상시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벌갑질을 알리오! - 인터뷰]

“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dongi78@ccej.or.kr



▲ 지난 3월 7일 경실련 1층 카페에서 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CRB법률사무소 조인명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왼쪽: 조인명 변호사, 오른쪽: 주민국 대표)

몇 해 전 터진 땅콩 회항사건은 재벌 갑질의 민낯을 알리며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의 이런 낯 뜨거운 행동은 재벌 갑질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재벌 갑질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훨씬 더 교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을과 병의 미투 운동처럼 재벌 갑질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재벌개혁 운동의 일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주)엠케이정공의 주민국 대표를 만나 재벌의 '갑질'을 넘어 1차 협력업체의 '을질'까지 내리 갑질을 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주)엠케이정공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국: 저희는 현대·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자동차 차체부품을 주로 생산하며,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운영했고, 제가 가업승계 2세입니다. 범퍼, 도어프레임, 카울 크로스바, 센터플로어 등 차체부품을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세원에 납품하는 회사였고, 현대차 협력사인증평가제도 SQ(Supplier Quality)인증 A등급도 받았었습니다.

Q. SQ A등급까지 받은 협력회사였는데 어떻게 부도가 난 건가요?

주민국: 무리한 단가 인하를 강요받고, 품질 유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받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결정을 할 때는 보통 입찰 같은 걸 통하는데, 저희는 입찰제 자체가 없었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얼마에 해'라고 하면 하는 거였어요.

단가 후려치기와 품질유지비용 전가로 적자가 쌓여갔고, 2016년부터 적자가 심해졌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연장이 안 되는 대출 2억 원이 있었는데 원청사에 단가 인하로 인

한 손실금액 보전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SQ A등급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Q. 가격결정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건가요? 하청업체는 교섭권이 없나요?

주민국: 네, 합의형태를 띠고 있는데 강제 CR(단가인하)이에요. 하청사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원청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이 들어옵니다. 단가를 정하기 전에 약정합의서를 요구하지만 이것도 허울뿐이에요. 서명을 거부하면 수주를 못 받습니다.

Q. 현대차가 '갑'이면 1차 협력업체인 세원은 '을'이고, 엠케이정공은 '병'이라고 하셨는데, 을이라고 한 세원의 갑질은 어떤 것인가요?

주민국: 회사가 부도날 경우 현대차나 세원 입장에서도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세원에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알리고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세원은 20억 원에 회사를 인수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체결했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 습니다.

세원은 엠케이정공 직원 전원도 고용승계

하겠다고 하고 본사 견학과 회식 등의 이유로 직원들을 세원 공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직원 모두 고마운 마음에 기쁘게 회식에 참여했는데, 같은 시간 세원은 직원 10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제조업의 핵심인 금형 및 완제품을 모조리 무단 반출해 가져간 뒤 M&A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조인명: 한 마디로 엠케이정공을 인수하는 척 하면서, 알맹이만 쏙 빼간 후 “인수하고 보니까 너무 부실이 많아 (인수) 못 하겠어”라고 하면서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계약금 돌려달라며 주 대표님이 살고 있는 집과 가족들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Q. 백주 대낮에 눈 크고 코 베인 격이네요. 금형을 탈취해간 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조인명: 저희는 실제로 (저희 소유인) 금형과 재고물품 등을 탈취 당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로 세원을 고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단계는 마치고 검찰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세원은 저희가 받은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행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반소 제기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에도 하도급법 위반(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부당감액, 서면 미교부,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등)혐의로 신고를 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공정위 신고가 들어가면 요즘은 원청들이 영악하게 보관하는 서버 Data를 다 날리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을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로 출장이나 파견 보내버리는 등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싹 날려 버립니다. 공정위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등을 할 수 있는 인원과 자원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거죠.

주민국: 현재 세원 회장 아들 둘이 개인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원 거 받아서 수출만 하는 법인인데, 이익률이 29.6%가 나와요. IT회사도 아닌데 말이죠. 그 형제 둘이 2016~2017년 2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그 회사에서 빼간 배당금액만 500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법인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본사 주가는 10배 이상 떨어졌어요. 상장회사의 부를 비상장회사로 이전시킨 것이죠. 형사수사 대상이 되어서 기소됐습니다. 현재 소액 주주들이 별도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지금 회사와 대표님은 어떤 상황이세요?

주민국: 결국 세원은 회사의 모든 핵심 자산들을 훔쳐갔고, 그후 일방적으로 인수를 취소 하였습니다. (생산시설이 없는) 저희 회사는



▲ 주민국 대표는 '너희가 경쟁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대·기아차 상위 5% 해당하는 업체도 손짓 하나에 망하는데 경쟁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었다.

부도가 났고 회사와 집, 자산들은 다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지금 강제적으로 휴업 상태구요, 소송을 하려면 파산도 할 수가 없대요. 소송의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회생불가죠. 앞으로 제조업은 못 하겠어요. 아니 안할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제조업 사장님들은 정말 애국자라는 소리예요.

원청에서 회유하는 대로 법정관리하고 고의 부도를 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났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올해 다섯 살, 세 살이 됐는데 유치원 보내고 뭐라도 해야 하니까 저수조 청소 아르

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며 살았어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1심까지도 못 갔는데 벌써 1년 지났어요. 몇 년을 끌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상대는 계속 시간을 끌어도 아쉬울 게 없죠.

Q. 이런 갑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조인명: 부당한 단가로 결정한 부분들과 단가를 감액하고 위탁을 취소한 부분들 모두 입증 책임이 하청업체에게 있어요. ‘부당’하다는 걸 피해자인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데 원청회사의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쉽지 않은 과정이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공정위나 사법부의 판단은 갑을관계로 이 회사를 보지 않고 대등한 법인간의 관계로 봐요. 일반 소액임차인이나 임대인처럼,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 관계로 보지 않아요. 회사 대 회사, 법인 대 법인의 대등한 관계로 봐요.

저희는 그래도 언론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공정위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도움도 받았지만,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조사 자체도 딜레마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위가 형사고발하는 비율이 1%도 안 돼요. (실제로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총 신고 건수 7,298건 중 경고 이상의 제재는 547건 (7.49%), 형사고발은 20건(0.27%)에 불과합니다.) 하도급법에는 을들이 단가 조정신청도 갑에게 할 수 있긴 한데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형해화된 조항에 불과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부당하다는 것을 입

증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이 되어야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약자들은 돈도 없고, 원청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 주면 입증할 길이 없거든요.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대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이게 무서워서라도 불공정거래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거래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것 같아요.

주민국: 1차 협력업체 경영자들은 재벌이에요. 현대차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대놓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탄 받을 것들은 1차 협력업체들에게 행동대장 격으로 다 시켜요. 그 대신 현대차로부터 물량이나 단가로 보상을 받는 거죠.

중소기업은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 가압류를 제일 먼저 신청한 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희생지원이나 재기 지원 등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거래를 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고,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기부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국회 세미나에 와서 신고센터를 몇 군데 늘렸다는 그런 실효성 없는 대책만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원청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



▲ 조인명 변호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잔인하고, 권위적이며 주종관계에 아주 익숙하다고 했다.

이면 소송하는 동안 (상환)유예를 해준다든지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블리소 블리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게 상징적으로 도입돼서 더 이상 꿈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30년 전 시민의 힘으로 경실련이 창립되었는데,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한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정표 前공동대표님은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

조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최고 강자는 중간 강자에게, 중간 강자는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쪽쪽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업체가 9,000여개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500만 명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재벌들도 더는 이런 야만적인 갑질 행태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 대표님 같은 재벌 갑질 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고, 거래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들이 속히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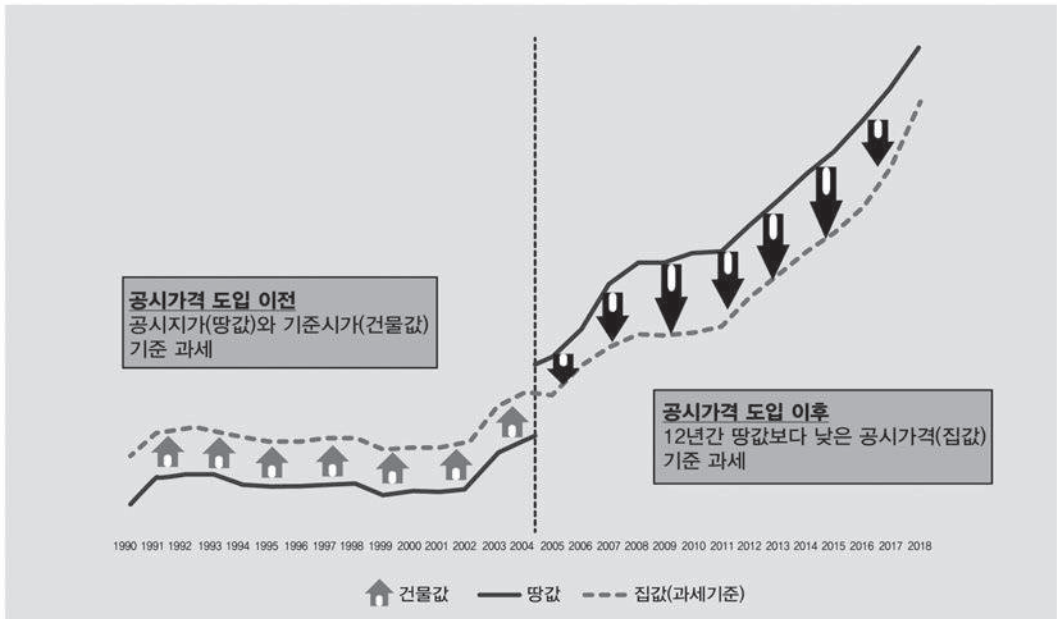
공시가격 제도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는 더 낮아졌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seongdal@ccej.or.kr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고가단독 주택의 보유세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아파트와 상업업무빌딩, 고가단독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과세를 조장한다고 비판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시

공시가격 도입 전과 후 고가단독주택 공시지가 공시가격 비교



가격 도입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더 낮은 보유세를 십수 년간 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시가격이 오히려 보유세를 후퇴시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도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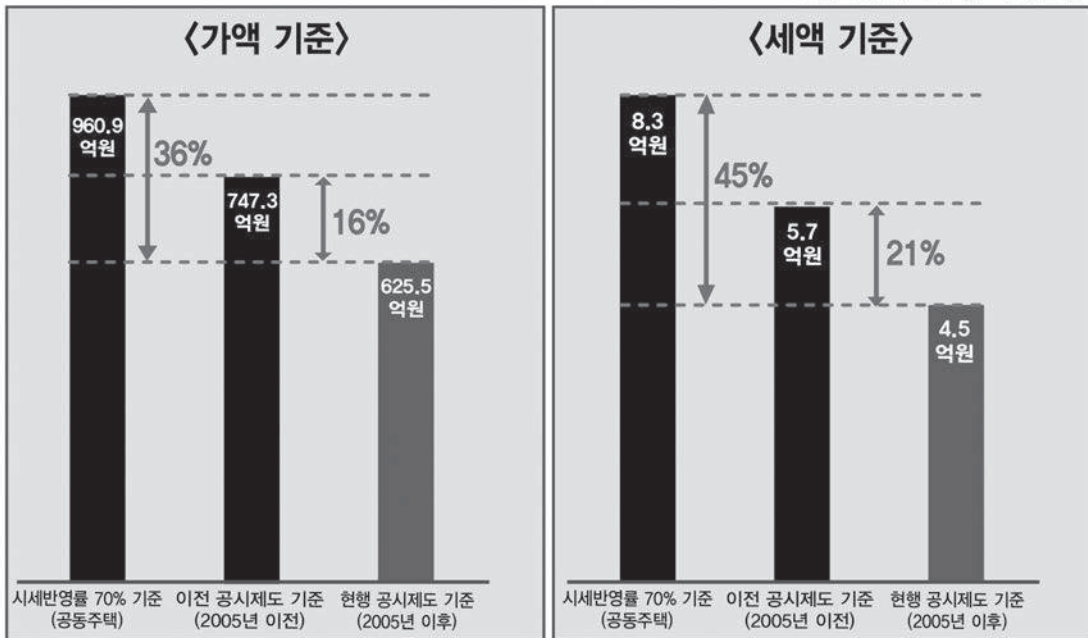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되기 전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은 땅값인 공시지가(국토부장관 고시)와 건물값인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 고시)이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

산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너무 낮아 불로소득 사유화가 문제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땅과 건물을 통합 평가한 공시가격을 2005년 도입했다. 이후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조사평가 후 공시되고 있고, 관련 예산만 연간 2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은 한남동, 이태원동, 삼성동, 논현동, 성북동 등 5개 행정동에 위치한 15개 고가단독주택을 선정, 1990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공시지가와 200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공시가격 도입 전과 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 특혜금액 추정

*14년간 공시가격 합계, 보유세 합계



공시가격을 조사 후 비교했다. 비교 결과 땅과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집값)이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최고 12%, 14년간 평균 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 인테리어와 안전 설비가 갖추어진 고가단독주택의 건물값이 땅속으로 잠긴 꼴이다.

공시가격 도입 이전처럼 땅값과 건물값을 더할 경우 공시가격과의 차액은 더 커진다. 국세청은 지금도 건물기준시가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이 15개 주택의 공시지가에 건

물기준시가를 더하여 산출할 경우 14년간의 집값은 747.3억 원이다. 반면 14년간의 공시가격 합계는 이전보다 16%가 낮은 625.5억 원이다. 과세기준인 집값이 낮아지면서 세금도 줄었다. 현 공시가격 기준으로 15개 주택에 14년간 부과된 보유세액은 한 채당 평균 4.5억 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도입 이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으로 부과했다면 세액은 5.7억 원이다. 공시가격 도입 이후 보유세가 21%가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집값을 산정했을 때

〈표〉 이태원동 A주택 보유세 특혜액 추정(공시가격 도입 이전 vs 이후)

년도	땅값(억 원)		집값(억 원)		공시지가 (땅값) 대비 (B/A)	보유세액(백만 원)			세금 특혜 (백만 원)	
	공시지가 A	공시가격 B	공시지가 +건물가액 C	시세 70% D		공시가격 E	공시지가 +건물가액 F	아파트수준 시세 70% G		
									F - E	G - E
5	25.9	25.2	28.3	44.1	97%	14	17	32	3	18
6	35.0	28.2	37.3	49.4	81%	17	25	37	8	20
7	40.6	31.7	43.3	55.5	78%	20	31	43	11	23
8	45.9	35.9	48.5	62.8	78%	24	36	50	12	26
9	45.9	35.9	48.5	62.8	78%	24	36	50	12	26
10	47.0	37.3	49.8	65.3	79%	25	37	52	12	27
11	47.7	37.5	50.8	65.6	79%	26	38	52	12	26
12	58.5	45.0	61.7	63.0	77%	33	49	50	16	17
13	66.9	53.0	70.4	74.2	79%	40	57	62	17	22
14	77.0	60.9	80.8	85.2	79%	48	70	76	22	28
15	79.9	64.4	83.8	90.1	81%	51	74	83	23	32
16	89.7	76.1	93.7	106.5	85%	64	88	105	24	41
17	98.7	93.6	102.7	131.0	95%	88	100	140	12	52
18	110.6	111.0	114.8	155.4	100%	111	116	181	5	70
합계 (대비)	평균 62.1	52.6	65.3	79.4	83%	585	774	1,013	189 (24%)	428 (42%)

주1) 주택 대지면적 371평, 평균 건물연면적 139평
 주2) 2018년 과세기준 일괄 적용, 주택소유자 5년 보유, 1인 1주택 소유로 가정
 주3) 집값의 합계란에

보다는 45%가 준다.

중소기업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A주택의 경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집값)이 낮았다. 땅값 대비 집값 비율이 2012년에는 77%까지 떨어졌으며, 14년간 평균 17%가 낮았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 14년간 누계액은 5.9억 원이고,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전보다 24%, 아파트보유자 보다 42% 세금을 덜 낸다.

이처럼 정부는 십 년 넘게 땅값보다 낮게 집값을 결정해왔다. 재벌 오너, 전직 대통령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가 제공되어 왔고, 집값 잡기에도 실패했다. 공시가격 도입 이후 14년간 가격조사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 등에 집행된 예산만 2조 원 이상이고 덜 걷힌 보유세액은 무려 7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

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2019년에도 조작된 영터리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정부는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등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시세 반영률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시가격 축소 조작, 불공정과세 조장, 예산낭비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조작 왜곡된 공시가격 실태로 발생한 재벌, 부동산 부자 등 상위 1%의 특혜를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것이며, 기초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행정감사 청구 등 관계자 처벌도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의 집값 하락세로 망국의 근원이라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 공개념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을 원한다면 공시가격 조작 중단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땅과 집 QnA

– 공시지가가 대체 뭐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bansug5@ccej.or.kr

공시지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고, 4월 말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됩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했고,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정부가 개별 필지와 주택에 매기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문제는 제쳐 두려고 합니다. 대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시지가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1. 공시지가가 왜 필요한가요? 무슨 근거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주택 혹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냅니다. 고가 주택이나 고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러한 세금을 걷으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경우 승용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잖아요? 주택과 토지의

경우도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의 적정가격을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게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입니다.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가격”으로 법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1,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공시업무에 소요됩니다. 땅값인 공시지가인 경우 전국 50만 대표 필지(표준지)를 국가로부터 용역을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산정합니다. 나머지 3,260만 필지(개별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에서 조사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22만 대표 필지(표준주택)를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면 나머지(개별지)는 각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전국 1,289만 호의 아파트(공동주택)는 한국감정원에서 일괄 산정합니다. 이런 기관

들이 가격 분석, 가격 심의 및 심사, 가격균형협약, 이의신청, 조정공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발표하게 됩니다.

Q2.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 질문은 국토교통부 자료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표준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할 당시 공시가격 인상이 논란이 되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가격변동 폭이 크지 않다.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다. 재산세는 직전 년도 대비 5~30% 이내로 제한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시세 6억 원)는 5% 이내, 공시가격 3억~6억 원 10% 이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30% 이내. 1인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는 보유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전체 표준주택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시세 15억 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이 5.86% 인상에 그치기 때문에 서민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설령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세 부담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친절한 정부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8년 11월부터 T/F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

〈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구분		서울 00 (시세 4.45억 원)	경남 00 (시세 4.69억 원)	충남 00 (시세 4.99억 원)
공시가격	2018년	2.49억 원	3.23억 원	3.11억 원
	2019년	2.72억 원	2.98억 원	3.15억 원
보유세	2018년	44.2만 원	63.7만 원	60.5만 원
	2019년	46.4만 원	57.1만 원	61.6만 원
건강보험료	2018년	13.3만 원	12.8만 원	26.8만 원
	2019년	13.3만 원	12.3만 원	26.8만 원

주) 2019.01.24.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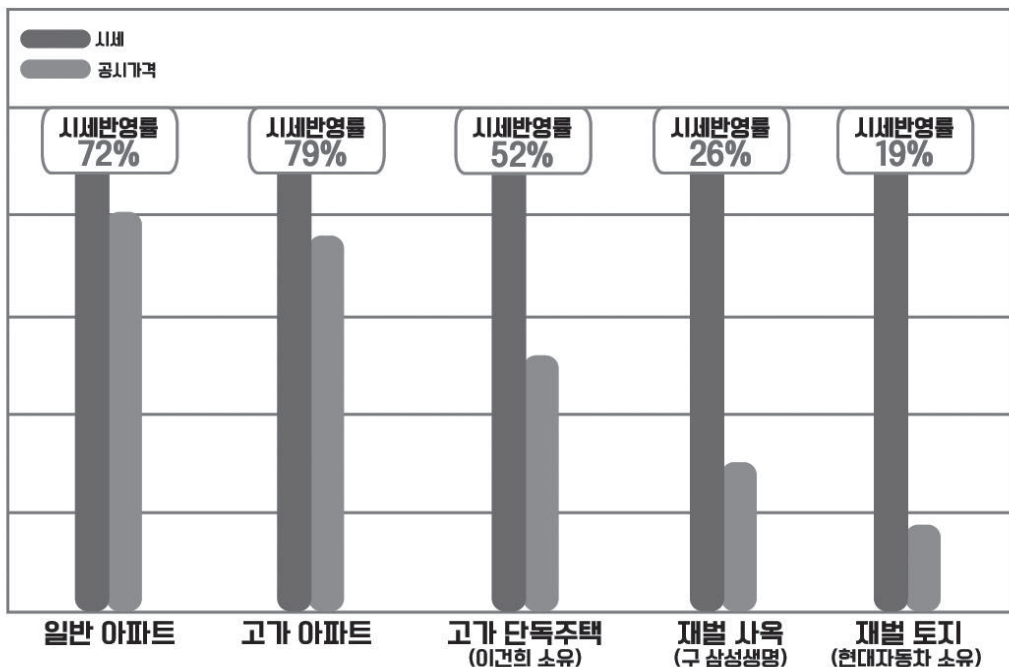
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Q3.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간 차이가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간 차이는 경실련도 뭐라 확정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 산정 주체인 정부가 산정 방식이나 과정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시민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공시지가 제도는 1990년에 도입됐습니다. 시작부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30%로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고, 참여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집값 안정을 목표로 2004년 12월 종합부동산세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중부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꼭 필요했는데요. 참여정부는 33.3%에 불과했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03년에는 36.1%로 2004년에는 39.1%로 끌어올린 뒤 장기적으로 시세반영률 8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열린

불평등한 시세반영률(2018년 기준)



우리당)까지도 경기침체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원안을 약화시키려 했고,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이후 정권이 바뀌고 종부세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당연히 공시가격 현실화도 탐탁지 않아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세금 문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세금폭탄으로 연결 짓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경실련이 여러 번 밝혔듯이, 우리나라 부동산은 고가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도 70에 대한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도 30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문제는 돈 없는 일반 서민이 100의 70을 내고 돈 많은 재벌이 100의 30을 낸다는 점입니다.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 없는 서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Q4.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지가 인상과 아파트 값 상승은 연관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과세 기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재건축단지가 아닌 이상 공시지가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

다. 또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미래의 땅 값, 집값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가격 상승분이나 하락분, 실거래가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엄청나게 올려 소유자들이 세 부담을 우려해 집을 서로 내다 팔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 세금 부담이 사라져 너도나도 집 사재기에 나서 집값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상한선, 공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앞에서 정부 자료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설령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



언제까지 원주민 내쫓는 재개발사업 방치할 것인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세운상가 주변지역 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을지면옥 등 오래된 유명 식당은 생활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비계획 재검토라는 서울시의 다소 파격적 행보의 배경에는 세운상가 인근지역이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되면서 오래된 식당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고 도심산업이 잇단 폐업 위기에 놓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붕괴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홍보했던 세운상가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민낯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도심산업생태계를 발전적으로 재편하고 역사문화가 조화되는 도심 관리를 하겠다며 세운지역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세운상가를 존치하여 도심산업의 메카로 재생하고 주변지역은 주민과 소상공인이 재정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

호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시는 도심산업상인의 재정착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공사기간 중 임시이주상가 제공 ▲신축건물에 도심산업 공간 확보 ▲기존 상인에 우선분양권과 입주권을 제공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관련 정책 수용 시 개발이익(용적률 인센티브)을 제공하도록 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계획이 사업으로 집행되자 현실은 계획과는 괴리가 있었다. 상인들은 이주대책 없이 강제철거로 쫓겨나게 되었다. 과거 재개발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세운 3-1구역과 3-4·5구역에서 재개발 후 재입주를 신청한 상가는 총 399개 사업장 중 61개소로 15%에 불과했다.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대책이라고 보기에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듯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재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부실하고 기존 설정의 근거도 불명확했으며 공공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책임을 넘겼기 때문이다.



〈표〉 세운구역 원주민 재정착률 및 인센티브 시세 추정

구역명	기존상인	인센티브(임시영업장 + 도심산업 + 우선분양) 합계		
	재정착률(%)	용적률(%)	건축 면적(평)	추정 시세(억 원)
세운3-1	15	85	2,360.5	472
세운3-4.5				
세운6-3-1,2	25	90	2,776.40	543

도심산업의 특성상 업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집단적으로 이주해 영업할 수 있는 임시이주상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존 상인의 20%에게만 제공되었고, 사업 후 재입주할 산업공간도 기존 상가 면적의 10% 수준에 그쳤다. 사업자는 이런 부실한 대책을 제공하고도 건물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 대책은 상인 재정착보다는 사업자 특혜 대책에 가깝다.

재개발사업 후에는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늘어난 면적은 사업자의 이익이 된다. 세운지역은 도심의 상업지역으로 사업 후 건축면적이 7~8배 늘어난다. 3층 건물이 20층으로 변신하는 셈인데, 도심의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을 고려할 때 토지주와 사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짐작할 수 있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지어 서울시에 원가로 팔거나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도 하지만, 사업을 통해 새롭게 확보된 면적 대부분은 사업자의 이익이 된다.

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모를 리 없는 서울시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하

고 사업활성화 등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지속적인 계획변경을 통해 기준을 완화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 주민과 산업, 역사와 문화가 보전되는 도시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에 주어진 각종 특혜와 개발이익부터 걷어내야 한다.

2016년에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UN해비타트Ⅲ(도시정상회의)에서는 포용도시 개념에 입각해 도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도시에 거주하고 일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도시권, Right to the city)가 있음을 선언했다. 세계 각국은 도시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하며, 서울시도 이를 천명한 바 있다. 유명한 상점뿐만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역의 상권을 일구며 살아온 소중한 구성원이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와 상관없이 이들 모두가 쫓겨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사지로 내몰리고 지역의 특성 없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바뀌어야 한다. ☺☺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들로 정당지지율 그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 –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경실련을 비롯한 5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해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 수를 배분하자는 것으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

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이 과대 대표되어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 간에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야3당의 요구로 현재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논의와 우리의 대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57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해 2018년 10월 11일,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면서다. 이로써 10월 18일,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출범했다. 정개혁위 회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현행 선거제도에 분명 대표성과 비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과정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1월 16일을 기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내걸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결코 파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자 12월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를 내놓았다. 제1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었고, 제2항은 이를 위해 10% 의석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2018년 12월 17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5당 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도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다시금 선거제도 개혁으로 생길 유불리를 따지며, 정치개혁의 본질

을 호도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퇴보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그 중에 하나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 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야3당이 주장해온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래서 공동행동은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이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만을 앞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1월 24일 전국의 경실련이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72시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1월 내 선거제도 개혁합의 이행이 어렵게 된 1월 31일, 공동행동은 1월 선거제도 해결합의 약속을 파기한 두 거대 정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경실련 대표단은 심상정 정개혁위 위원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바로 개별 국회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던 국회의원들조차도 본인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거나 개혁이 아닌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조사했고, 공동행동 차원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표 1〉 언론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찬성 70명)

	더불어민주당 (128명)	자유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7명)	계
찬성	27		24	13	5	1			70
반대	12	32	1				1		46
미온	13	2						1	16
무대응	76	79	4	1				6	166

〈표 2〉 정견조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찬성 36명)

	더불어민주당 (128명)	자유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7명)	계
찬성	6		14	10	5	1			36
반대		1		1					2
기타	17	1	1						19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의서를 발송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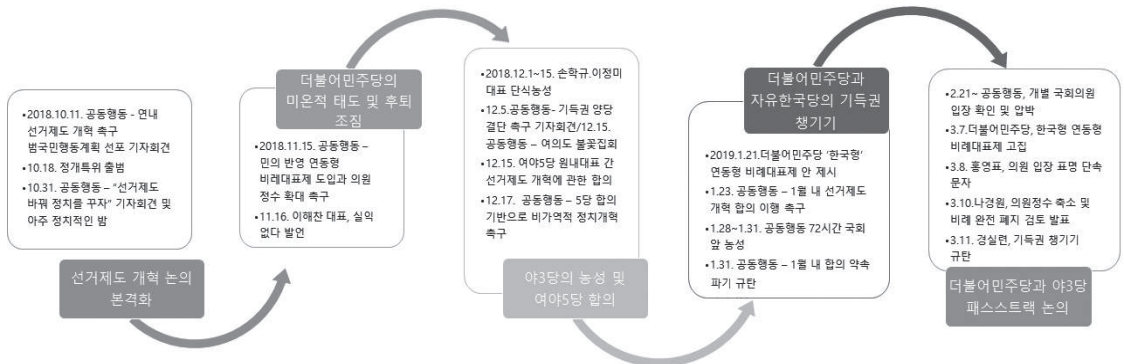
현재 여야 3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등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이 어려운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총회에서 협상안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므로, 시민사회와 야3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완

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먼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0일,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고려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 질의서 내용 : 2020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결과 : 찬성 36명, 반대 2명, 기타 19명 (기타의견을 제시한 19명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민주당 당론인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림〉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



선거제도 개혁의 후퇴 조짐(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난관)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협상 과정에서 최대 난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태도**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랜 침묵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에서 내놓은 안은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으로, 매우 후퇴된 법안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또한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② 또 다른 난관은 **자유한국당의 국민 호도(糊塗)**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국회 불신을 악용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가장 큰 난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저조한 국민적 이해도와 지지도**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정당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해한다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생기는 의미 폭을 축소시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주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은 거대 양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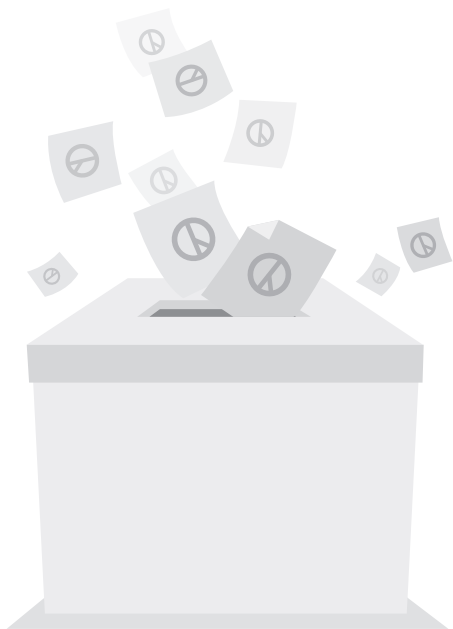
신뢰하지 않지만, 야3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깊다. 마지막으로, 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개별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운동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다음 총선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가. 일단,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함으로써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나타났던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기득권 국회를 타파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나가야 하는가. 경실련을 비롯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계속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협상

을 기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주도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듯 계속해서 기득권 챙기기로 일관한다면,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연대는 어렵고, 설사 합의가 모아진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후퇴된 안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정치 불신을 이용한 비례대표 의원 축소에 강력히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인지를 상상하게 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곧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



제주영리병원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영리병원 불씨 없애기 위해서 법률 개정도 이어져야 —

최예지 정책실 팀장
cyj@ccej.or.kr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둘러싼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2014년부터 시작이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해 끊임없이 공개요구를 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밀실에서 추진했다. 이후 2018년 영리병원 허가를 놓고 제

주도민은 숙의형 공론조사를 했다. 공론조사 위에서는 손해배상의 우려와 투자자들의 약속 이행을 위해 영리병원을 찬성했던 측과 영리병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숙의를 거쳐, 제주도민은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영리병원 설립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



▲ 사진출처: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고 결정했다.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의 결정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허가를 강행했다. 설립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기한인 지난 2019년 3월 4일까지 녹지병원은 개원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허가철회를 놓고 청문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에 관한 과정이다. 개원 무산으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청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 허가 철회가 결정 나지 않았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 녹지병원은 47개 병상으로 작은 병원일 수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 문제는 단순하게 제주도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영리병원은 투명한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병원이다. 한마디로 주식회사와 같고, 환자의 치료보다는 이윤이 우선시되는 병원이다. 돈벌이를 위해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의 증가, 의료 상업화, 국민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갖는다.

지금 우리나라 병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모두 비영리병원이다. 비영리병원은 이윤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고 병원의 시설 및 인력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은 자기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주변의 비영리병원의 의료비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도 덩달아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영리병원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처럼 영리병원 하나가 얼마나 문제를 불러일으킬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병원이 비영리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벗어 버린다면, 오로지 돈벌이에만 몰입할 것이며, 메르스 같은 감염병 대응 등에 대해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준비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강제한 방법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또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언제든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즉, 전국 언제 어디서든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다. 영리병원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전국으로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일인 것이다.



▲ 사진출처: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녹지병원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최근 경실련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에서는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어렵게 입수했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녹지병원은 애초부터 병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계획이었다.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있는 네트워크형 영리병원인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병원의 운영지원, 환자 유치, 사후관리를 맡는다는 업무협약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진 채용, 환자 사후관리 등 병원 운영의 핵심은 중국의 BCC와 일본 IDEA가 맡는다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 의료진이 중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중국 영리병원이 한국의 영리병원을 설립에 이용될 거라는 의심이 사실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결국 녹지그룹은 병원 경영의 경험이 없는 무자격자이며, 내국인 우회 투자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녹지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 사업계획의 승인과 개원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인수하고,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제주도가 녹지병원의 허가를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해야 한다. 녹지그룹은 애초부터 병원 운영자로 부적합했고, 개원 기한도 넘겨버렸다. 이는 녹지그룹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녹지병원의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서귀포시는 의료 취약지 중 하나로 영리병원보다는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녹지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투성이 녹지병원뿐 아니라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이 규정부터 당장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영리병원이라는 불씨가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

다시, 문제는 신뢰다

김일한 통일협회 운영위원 /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교수
earthkm16@gmail.com

1997년 6월,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의 대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회담 결과가 ‘결렬이 아니다’ ‘양국정상이 새로운 대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등등의 관전평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전제로 한 회담이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결렬이 맞습니다. 양국 간에 ‘구체적인 합의안이 있었다’ ‘그러나 문턱이 높아졌다’ 등등의 이유도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안’에 사인이 없다면 역시 결렬이 맞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단계적 해결’을 제시한 북한의 입장이 결국 회담을 무산시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결국 문제는 다시 ‘신뢰’의 부족이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차분하게 북한과 미국의 신뢰문제를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22년 전인 1997년 6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호텔에서는 작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4일간에 걸친 회의는 전쟁 당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를 포함해서 양국의 책임자들이 모여 과연 전쟁은 피할 수 없었는지, 전쟁이 확산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측 대표 맥나마라는 다음과 같이 하노이 대화의 교훈을 강조합니다.

“하노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베트남 전쟁은 미국과 베트남 쌍방의 지도자가 보다 현명하게 행동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대화의 교훈을 바르게 배운다면, 미래에 이와 같은 전쟁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훈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선 적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상대가 적일지라도 최고 지도자끼리의 대화, 그렇습니다.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게을리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 북미협상으로 돌아오면, 둘 사이에는 여전히 건너지 못할 불신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해서 대량살상 무기 전체를 폐기하라고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맞섭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과정을, 북한은 미국의 관계정상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메트로폴호텔 대화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로운 파국을 준비하기 보다는 오래된 미래를 다시 복기하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양국은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대화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새로운 북미협상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집단지재에서 독자제재로, 외통수 정국의 새로운 상상력

완전한 비핵화를 신뢰하지 않는 미국과 시간을 두고 관계정상화 이행 약속을 확인하겠다는 북한 사이에 대치상황은 퇴로가 없어 보입니다. 양국의 빅딜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UN의 대북한 집단제재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제재해결 방법에 대한 양국 간의 믿을 만한 약속과 이행 로드맵 없이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UN 집단제재를 안보리이사국 각각의 독자제재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한 해법입니다. 건

고한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스냅백(snapback) 장치를 통해 조건부 해제가 가능할 겁니다. 대신 북한은 가시적인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에서 진행되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양국의 '신뢰대화'와 병행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한국역할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면 어떻고, 트럼프의 푸들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전쟁만 없앨 수 있다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따위 말장난이 대수겠습니까.

중재자 없이 진행된 중국과 베트남의 대미 관계정상화 과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단 70여년 만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과의 신뢰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책임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흥물스런 철조망이,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이 국경선인줄 알고 살아온 남북한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한반도의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

꼼짝 마! 삼성!!

구미경실련과 Channel NewsAsia와의 인터뷰

글_ 정호철 재벌개혁본부 간사 (hjung@ccej.or.kr)
 감수_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gumi@ccej.or.kr)

“삼성 스마트폰 공장도 이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에요”? Channel NewsAsia의 특파원으로부터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최근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을 줄이고,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구미지역의 공장 일부를 수원본사 등 다른 지역으로 투자·이전 시키면서, 아마도 “삼성 스마트폰 베트남 이전” 소문까지도 해외시장에 퍼진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중국의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자사의 네트워크장비 보안문제로 다소 휘청거리는 가운데, 그 틈을 타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공급사업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통신원은 우리에게 전했다. 더군다나, 올해 1월경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네트워크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그의 비공개대담에서 5G네트워크 등 혁신성장 동력사업에 기술인력 투자를 요청한 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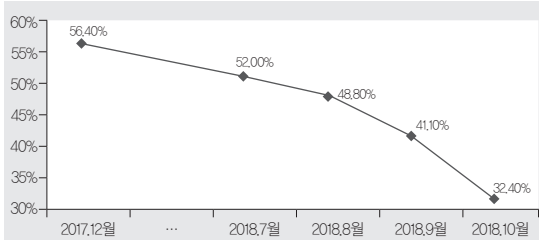
Q) “혹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구미 공장들의 구조조정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현재 구미지역 고용현황은 어떤가요?”



삼성의 해외시장에 대한 설비투자과 노동이동을 견제한 다소 노련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우리의 대답은 단호했다.

A) “아.니.오. 적어도 삼성 스마트폰 공장만큼은 어디 못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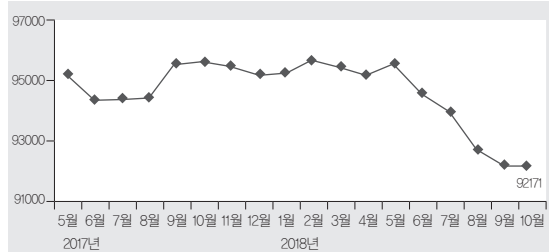
이 같은 공장 철수/이전 논란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구미공단 일대에 대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문제와 하청기업들의 지역경제 침체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안 속에 계속 반복돼왔다.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구미는 1969년 조성된 구미국가산단 제1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에 제5단지를 착공하였지만, 이 후 기



[도표 1.] 구미지역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공장가동률 추이(월 평균)

*출처: 매일일보(2019, 구미시의회 재인용)

구미시의회 의정보고에 따르면, 구미지역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연평균 공장가동률의 경우 59.8%(2016); 40.0%(2017); 39.3%(2018)으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와 삼성의 공장이전 발표 이후 1년 사이에 (-)0.7pt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18년 같은 사업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6.1%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제조·하청에 상당히 의존하는 지역산업 경제구조의 특성상 다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대업을 포함한 5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 연평균 80.0%(2014); 68.0%(2015) ... 66.5%(2017); 61.3%(2018,1-2분기)으로 역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도표 2.] 구미지역 전체 제조업체 고용인원 추이 (단위: 명)

*출처: 구미상공회의소(2018)

또한 구미상공회의소의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지역 경기악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의 금년 1분기 예상 전망치는 62.4pt로서 직전년도 4분기 실적 53.2pt과 비교하면 (-)9.2pt로 체감 경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70pt로서 전년 분기실적과 동일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61pt로서 (-)12pt만큼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63pt로서 (-)23pt만큼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대기업의 제조·하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결국 대기업들의 이전/철수는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일자리확대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

대와 달리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과 생산물량 축소로 인해 지역 하청기업들의 입주율과 공장가동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도표 1]. 특히 2017년부터 대기업 하청 제조업체의 고용인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도표 2]. 일례로, 같은 해 LG는 소형 디스플레이 생산을 제외한,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공장과 함께 직원 8천여 명을 파주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

LG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6곳 중 2개의 라인이 정지됐고, 직원들은 떠났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계속 더해졌다. 삼성전자는 2018년 6월경 구미 제1공장 네트워크사업부 생산인력 4백여 명 중 50%를 수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경에 제1공장부지 일부를 한화그룹에 매각했고, 현재 잔여부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 뒤이어 삼성은

그룹 차원의 180조 원 투자 5대 전략사업에서 구미제2공장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시켰다. 공장직원들도, 개발자들도, 삼성임직원들도, 구미시민들도, 우리들 모두는 불안했고, 시민들은 수원 이전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찬성했다. 정부와 대기업의 혁신-주도-성장 이면에는 하청-고용-축소와 같은 불안의 그림자가 구미 지역에 차츰 드리워지고 있었다.

Q) “공장가동률이 꽤 낮은 편이네요.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 같은 철수/이전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대기업 공장의 이전 및 타 지역을 잇는 내륙교통의 발달로 인한 상

대적인 입지 경쟁력 감소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이 구미와 같은 산업 도시를 떠나게 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후자의 경우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스마트폰 수출생산 공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 물류비와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자면, 결국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간과한 이재용 재벌총수와 문재인 정권의 “자유방임적” 재벌중심 정책, 즉 포용적 규제완화를 통한 끝이 보이지 않는 혁신-낙수-성장과 같은 구태정책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현재의 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삼성과 정부는 구미 제2공장 스마트폰 단지를 향후 추가·이전시켜서는 결코 아니 될 말이다. 삼성의 “인건비 혁신”은 산업전통과 지역 상생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또 정부의 “자구적 혁신”은 포용적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땀질식의 처방으로서만 작용할 뿐이다. “구미공단 스마트폰 생산인력을 1만명에서 8천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삼성의 비공식 구조조정계획 문건이 유출된 바 있다. 삼성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한, GM군산공장의 철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지역 일자리정책의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들 지역 간 전통산업경제의 공유와 양보의 미덕마저 이제는 정권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삼성의 눈치만 보며 GM군산공장 부지에 투자할 것을 적극 요구, “개입”해 왔다. 삼성과 정부에게 과연 구미란 무엇이었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

A) “글쎄요, 보이지 않는 혁신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은 말을 빌려서 정부의 강변(強辯)을 대체하고 싶네요.”

“제도적 인간”은 반대로 자신만의 상상에서나 꾀 현명할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은 종종 이상적인 정부계획의 제 멧에만 빠져, 그 어떤 정부계획의 일부에 대해 그 어떤 “타협”의 작은 진통조차도 겪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걸쳐서, 대중의 큰 관심사나 또는 이에 반하는 강한 편견 속에서 아무런 숙고도 하지 않은 채, 정부계획을 독단하게 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체스판 위에 다양한 말들을 배열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손쉽게 배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가 체스판 위에 있는 단일한(single) 각각의 모든 말들의 개별적 움직임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모든 단일한 말들에게 입법부(“정부”)가 원하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 개체의 움직임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움직임의 원리가 일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동 한다면, 인간사회의 게임은 순조롭고 조화롭게, 그리고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이와 반목은 그 게임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므로 우리 사회를 언제나 병폐의 정점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Vol. I, Chap. II, Pp. 26–7, para. 12. 🎲🎲

반갑습니다!
신입회원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회원
jjy3001@naver.com



안녕하세요!!
신입회원 정준영입니다.
저는 올해 32살 된 청년입니다.

제가 경실련을 알게 된 건 대학시절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 지역경실련 지부장으로 활동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평소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있던 교수님이 몸담고 계신 단체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경실련 페이스북 페이지를 2년 동안 구독하게 되었고, 다른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외압이나 대중의 인기로 영합하지도 않으면서도 소신껏 공익의 목소리를 말한다는 걸 깊게 느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영등포에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단골로 오시는 폐지 줍는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그분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주택가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시다 대형 쇼핑몰과 편의점의 난립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한 편의점에서 폐기 도시락을 얻어가고 950원짜리 라면으로 매 끼니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현대사회가 아무리 경쟁이 필연적인 사회라고는 하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 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대 중국의 유학자이자 성악설의 제창자인 순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법의 뜻은 생각 안 하고 법조문을 알기만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며 약자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의 참 뜻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일으키거나 법조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꾀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떠오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기해년 새해에 당장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생각이 깨어 사회를 배우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경실련을 통해 저희 세대들과 선배 세대님들이 합심해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제15기 2차 중앙위원회]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전국경실련 동지들!”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dongi78@ccej.or.kr



전국 팔도를 돌며 경실련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위원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22일~23일 1박 2일로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모였습니다. 각 지역의 한 해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나누며 중요한 의결사항도 논의하고 승인하지만 무엇

보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서로의 안부도 묻고 전국경실련이 함께 힘을 모으며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활동가의 삶이란 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전 중앙위원회 행사들 통

해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활동가들이 안 보일 때는 많이 아쉽습니다. 때로는 마치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듯 남아있는 활동가들을 보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안도하고, 안 보이는 이들을 떠올릴 때는 경실련은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좋은 동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움을 달래니다.

중앙위원회 행사는 크게 오후에는 정책협의회, 저녁에는 중앙위원회로 진행됩니다. 전국의 경실련 활동가, 임원들이 먼 길을 달려와 모이자 박상인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정책협의회가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의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 발표,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집중하기로 한 재벌개혁과 부동산개혁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발제 후에는 재벌개혁, 부동산개혁, 지방정부 공약이행평가 3가지 주제로 분임토의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공동대표단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저녁 밥상을 나누고, 제15기 2차 중앙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권역별로 모인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하고, 이의영 의장이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예산안과 사업보고·계획안, 군포경실련 재창립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권순남 외 16명을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끝으로 중앙경실련 김건희 간사와 양평경실련 김은미 간사의 선창에 따라 '경실련 우리의 다짐'을 함께 낭독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팔도음식 나누기 대신 도봉산 아래 음식점에서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깊은 대화로 길고 아름다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산을 오른 건 아니지만 1박 2일 도봉산 정기와 전국 동지들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올 한해도 전국 경실련 모두가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중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



▲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과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재벌, 부동산 개혁'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 재벌개혁 분임토의에서는 재벌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을 일반 시민들, 특별히 젊은 층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부동산 개혁 분임토의에서는 지역의 골프장 문제를 통해 기업의 부동산 투기와 강제 수용권 문제 등을 제기하고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지방정부 공약이행평가 분임토의에서는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한 우수지역 사례를 발표했고 3월 중 관련 워크숍을 진행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 공동대표·집행위원장단 회의에서는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역경실련 역사와 활동을 정리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세월호 5주기 인터뷰]

“우리 엄마, 아빠들이 포기 안 하면 끝나지 않는 거니까 진실은 꼭 밝혀질 거예요!”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前집행위원장(예은 아버지)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dongi78@ccej.or.kr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합니다. 많은 시민이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마치 세월호의 끝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 아니고,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전 정권의 방해로 시작도 하지 못했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前집행위원장(예은 아버지)과 만나 그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Q. 세월호 2기 특조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2기 특조위 정식명칭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예요. 1기 특조위가 2016년 6월 30일자로 강제 해산되고, 두 번째 특조위를 만들 때도 당시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계속 방해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기 특조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가슴기를 같이 다룰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였죠. 가슴기 사건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최대 120명이라는 한정적 인원과 한정적 예산, 최대 2년밖에 안 되는 이런 조건 속에서 대형 참사 2개를 같이 다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본회의 통과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 지난 3월 11일 416연대 회의실에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前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조사 개시선언을 했고, 이제 조사를 시작한 지는 만 4개월 정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1기 특조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거나 대폭 조사가 진전되거나 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시작 단계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Q. 1기 특조위는 강제해산 당해서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선체조사위원회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10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성과를 뚜렷하게 남기진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선체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후반부 한두 달밖에 없기도 했어요.

보고서를 냈는데 ‘내인설’과 ‘열린안’ 두 가지를 내놓았어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세월



▲ 유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왜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호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내인설’로 결론 내린 파트가 하나 있고, ‘열린안’은 세월호 자체의 문제만으로 침몰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다른 침몰의 원인이 있는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채택했어요. 결론이 없는 거죠.

선체조사위원회는 실패한 조사위원회라고 규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실패를 했다고 저는 평가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열린안’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제3의 힘이 세월호에 가해졌다는 것을 이전 정권에서

는 모두 음모론으로 치부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탄압했고 검찰은 내인설, 기계고장, 과적, 선원실수로만 세월호 침몰을 설명하고 기소했었어요.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게 무엇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어떤 힘이나 조건이 세월호에 가해졌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Q.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은 무엇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무엇입니까?

A. 어떤 시각에서 보면 다 밝혀졌고, 어떤 시각에서 보면 하나도 안 밝혀졌습니다. 구조와 관련해서는 해경이 탈출 방송을 안 했고, 탈출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미 증명됐어요. 해경은 정확하게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나왔고 일반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것이라고는 스스로 탈출해서 물 위에 떠 있거나 배 위에 기어오른 사람을 옮겨 태우는 것이었어요. 해경 대원들이나 비행기를 타고 왔던 항공 대원들이 배 안으로 단 한명도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침몰 원인도 모두가 저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예상했었어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방송을 봤잖아요. 저 상태로 열 몇 시간 스물 몇 시간 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가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완전 침몰했어요.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조사해보니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드러난 거지만 배 안에는 수많은 문이 있잖아요. 특히 배 하부에 기관실이나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수많은 문이 있어요. 이 문들은 항상 닫아놔야 하는데 그 수밀문의 대부분이 열려 있었어요. 왜 예상보다 빨리 침몰했는지도 밝혀진 거죠.

그런데 안 밝혀진 것은 뭐냐?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것은 다 드러났는데, 그럼 왜 그랬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구조

하지 않았는지는 안 밝혀진 거죠.

배가 급변침하고 침몰을 시작한 이후에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됐었어요. 바다로 나오기면 해도 건져 올릴 배들이 참고 넘쳤고요.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갑판으로 나가서 탈출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방송 및 명령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빠져나오는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공통적 의견이 짧으면 6분, 길어야 8분, 6~7분이면 모든 승객이 바다로 탈출 가능한 조건이었어요. 최소 1시간이 있었어요. 여유 있게 잡으면 1시간 20분까지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해경이 한 일은 선수에 가서 조타실 선원들 빼오고 배 중앙에 가서 기관실 선원들을 빼 온 것밖에 없었어요.

세월호 참사가 세월호 사고가 아니고 참사인 이유는 살 수 있는 304명, 당연히 살아야 하는 304명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살아 돌아왔더라면 세월호 사고라고 부르겠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왜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었나?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는 전혀 밝혀진 게 없죠.

Q.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권 이후 달라진 게 있는지, 지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 유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박근혜 탄핵하려고 광화문 나가서 단식 한 게 아니고, 세월호 참사의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A. 박근혜 정권 시절 진상규명이 안 된 것은 99%가 정권에서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해산시키고 온갖 꾀약질을 다 했습니다. 새 정권은 많이 다르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다르고, 기대부터 다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해상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보려고 하는데, 이건 사람을 죽인 살인 범죄예요. 특조위가 범죄 수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특조위가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들을 수사해서 조사와 수사가 어우러져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Q. 5주기를 맞아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A. 박근혜 탄핵이 우리한테는 플러스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도 났어요. 많은 사람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이 세월호 아이들 때문에, 엄마아빠들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었다, 광화문에서 버터주셔서 촛불 들 수 있었다고 얘기해주셨어요.

근데 정작 박근혜는 세월호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소위 함께했던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으니까 됐잖아요, 벌 받았으니 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힘이 짝 빠지더라고요.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광화문에 나가서 단식한 게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의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진상규명해야 하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며 동력이 빠지고 진상규명 명분을 갉아먹는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된 거죠.

5주기를 맞아 추모문화제나 시민행사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제대로 교정하는 것이 5주기를 앞둔 피해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세월호는 안전사고가 아니다’와 같은 생각으로 세월호 참사를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들과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놀러 가서 우연히 일어난 안전사고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들이 포기 안 하면 끝나지 않는 거니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생명안전공원에서 나눌 교훈을 찾을 수 있다

Q. 4.16 생명안전공원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생명안전공원은 기본계획 부지가 결정났고 실제로 건립을 위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용역 실시 중인데, 올 6~7월쯤 용역 결과 나오면 설계 공모가 들어갈 거예요.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대부분의 희생자가 청소년들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청소년, 젊은이들 또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부담 없이 찾아와서 도시락 먹고 잔디에서 뛰어놀며 이미 오래 전에 그곳에서 뛰어놀았던 250명의 언니와 오빠들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훈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해요.

문제는 무슨 교훈을 나눌 것이냐 했을 때도 진상규명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꾸로 되묻는 거죠?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훈은 구명조끼를 빨리 입어야 하고, 생존 수영을 가르쳐야 하고 해경 구조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해경이 구조훈련을 못

받아서 구조 못 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 없는 얘기거든요. 진상규명이 안 된 채 자꾸 교훈을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생명안전공원에서 나눌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을 떼어버리고 생명안전공원이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도 추모공원과 봉안시설, 추모비 만들면 이제 그 일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돈으로 배상해주고 추모비 하나 세워주고 가족들이 받아들이면 모든 게 끝나는 식으로 추모사업이 악용돼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의 끝이 아니고 진상규명의 시작이고 이유이고 동기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명안전공원 설계 공모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일은 유명한 건축가나 디자이너 같은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고 5년 동안 저희와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던 시민들이 그들보다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랑 5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진상규명을 외쳤던 시민들이랑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누구의 마음이 더 진심이겠어요? 시민들이 직접 팀을 만들고 대학생들, 관련 공부하는 학생들, 교수님이나 조교들을 같이 모아서 하든지 동네마다 세월호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엄마아빠들도 많거든요.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아이디어를 내주고, 그걸 모아서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은 설계도 해서 실제 공모도 참여해주시고 이렇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큰 동력이 되잖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걸 느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도 진상규명이 돼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기 특조위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문화산책]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조성훈 정책실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제주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제주 벚꽃, 유채꽃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등...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도에 켜켜이 쌓인 슬픔과 분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제주 4.3항쟁 이야기이다. 제주도에 남겨진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했다면 제주도를 온전히 봤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몇 년 전 제주4.3평화공원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이름만 들었을 뿐 사건의 실체를 몰랐기에 제주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제주 4.3항쟁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주 4.3항쟁은 한반도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좌·우익의 개념조차 몰랐던 제주도민들이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무고하게 고통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군인과 경찰이 집단 주민 학살이 벌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한반도 전쟁 이후 발생할 집단 학살의 전주곡이기도 했다. 때문에 어느 학살보다 더 슬프고, 가슴 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 4.3항쟁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5년이나 지

나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 또한 4.3항쟁 66주년을 맞는 2014년에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참회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당시 제주민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요량이면 빨갱이라는 사슬에 묶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이제는 마음 놓고 울 수 있느냐”며 울먹이던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이 이를 말해준다. 명백히 국가권력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허나 제주 4.3항쟁에 대한 진실 캐기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근현대사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도움을 얻기 위해 읽은 책이 있다. 허영선 시인의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이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제주 4.3항쟁을 다루고 있다. 책의 묘사는 굉장히 사실적이며, 구체적이다. 또한 구술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매우 생동감이 넘친다. 그렇기에 당시 제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4.3은 말한다. 역사의 진실은 가둔다고 가둬지는 것이 아님을, 역사는 미래를 위해

있는 것임을.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삶은 계속된다. 그러기를 나는 믿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했던 상처는 분명 드러내야 하고, 그 드러난 상처는 햇볕에 바짝 말려야 깨끗이 소독이 된다. 그래야 다시 새살이 돋는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여전히 이러한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에는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광복 직후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원죄가 수많은 양민 학살로 이어졌고, 군부독재를 탄생시켰으며, 반역사적 세력의 망언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반복되기에 이제라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드러내고, 소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 4.3항쟁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제주 4.3항쟁의 진실은 소중하며, 역사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제주 벚꽃 이면에 놓인 그 슬픔 말이다. ööö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가지 법안!!!

지난 3월 7일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동안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8가지와 철회해야 할 법안 2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 분양가 상한제 부활 등 경실련이 선정한 법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 1,000억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절반 수준

경실련의 조사 결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실거래가) 대형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대비로는 27%로 더욱 낮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실거래가의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입니다. 영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대형빌딩 소유자들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무려 14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 비례대표제 폐지가 선거제도 개편안??

지난 3월 1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선거제 개편의 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약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욕심이 담겨있는 안입니다.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비례대표제 폐지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 이메일 news@ccej.or.kr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withccej

☎ 전화번호 02-766-5627~5628

f Facebook



🐦 Twitter



Homepage



📷 Instagram



플러스친구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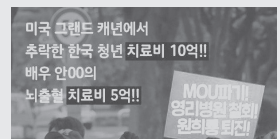
- 01.22 •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01.23 •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틀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 [카드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야 한다!
- 01.24 • 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 [기자회견]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 01.25 •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 01.27 •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 원)의 최대 9배(42조 원) 규모
- 01.29 • 문재인 정부의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
 - [토론회] 바람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 01.30 • [토론회]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 01.31 •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2019. 02

- 02.01 • [카드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야 한다!(2)
•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
- 02.08 •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 02.11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02.12 • [공개서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 짙곰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렵다
• 김종민 간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주문
- 02.13 • [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 설립 반대!
• [기자회견]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 02.14 •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기초 단위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02.15 • 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하라
- 02.17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02.18 •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02.19 •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라!
- 02.21 •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응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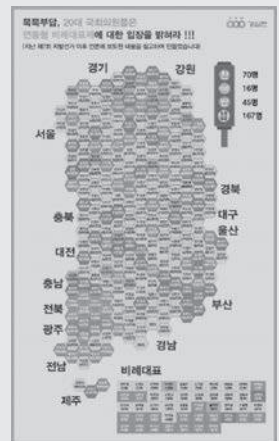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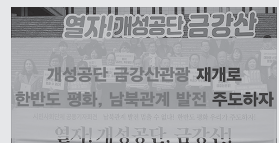


- 02.25 •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
- 02.26 •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기자회견]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02.27 •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이루어져야
• [현장스케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 02.28 • [논평] 북미정상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 해답은 대화뿐



2019. 03

- 03.04 •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
•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 03.05 • [성명]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 [논평] 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 03.06 •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03.07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라
• [기자회견]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기자회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주도하자
•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 [인포그래픽] 언론을 통해 살펴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입장
- 03.08 • [의견서]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03.11 • [논평] 정치개혁에 관한 의원 입장 표명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탄스럽다
- [논평]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입법과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03.12 •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03.13 • [의견서]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보도]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 03.14 • [논평] 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 [공개질의] 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 [정견조사] 선거제도 및 국회개혁 관련 국회의원 전수 결과 발표



- 03.15 • [성명] 문재인정부,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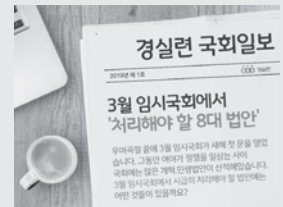


- 03.18 •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03.19 •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4)
- [성명] 공시가격 시세반영을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성명] 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즉각 사퇴하라



- 03.20 • [논평]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성명] 제대로 분양권이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토론회]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 03.21 • [카드뉴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
-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81명, 가입일 2019년 1월 22일~3월 21일)

강민정	김여진	마양호	박종혁	손호준	신화엘리베	위성태	이수정	이정희	주삼식	홍호승
권도형	김영수	문성한	박진우	송경훈	이테(주)	윤경선	이애정	전경아	주윤철	
김경미	김영학	문성한	백지수	송명기	심서현	윤상준	이애형	정은호	채수아	
김남신	김윤정	문재철	서현국	송영준	심재준	이권용	이영국	정의정	최규만	
김도원	김은주	박명원	석진국	송재창	안건수	이동진	이용학	정준영	최봉준	
김동수	김철근(해성스님)	박상율	성문현	송해나	안일규	이두호	이용호	조은영	최용찬	
김병주	김태동	박완희	성웅	신명호	안중호	이명숙	이은림	조종호	최희영	
김안나	김태영	박정연	손영환	신수진	오세훈	이승애	이은주	주명식	한민석	

중앙강실련	고지숙	권일민	김기은	김병수	김순득	김우영	김정호	김찬호	김해성	남상욱
	공병욱	권준기	김기태	김병재	김승보	김원석	김정호	김창균	김현동	남원호
(주요영향권행사 대표)	공양석	권준석	김길락	김병주	김승우	김원태	김정훈	김창선	김현석	남재걸
	강덕순	공정표	권준우	김남덕	김승하	김유찬	김제후	김창식	김현성	남현주
	강마야	공진하	권찬	김남수	김승현	김유환	김종근	김채윤	김현수	남호원
	강명구	곽기훈	권철민	김남훈	김병학	김시연	김종덕	김천	김현수	노상현
	강문희	곽보경	권혁근	김대균	김병호	김시원	김종록	김철	김현정	노연경
	강민구	곽복률	권혁민	김대선	김보경	김양규	김윤석	김종목	김철주	김현정
	강병철	곽새별	김갑수	김대성	김보라미	김양수	김윤희	김종민	김철호	김현희
	강선미	곽의영	김건호	김대중	김복연	김양진	김용	김종배	김철홍	김형규
	강승구	곽지웅	김경모	김대진	김복환	김연규	김은경	김종찬	김철환	김형근
	강승규	곽혜정	김경배	김대현	김사길	김영미	김은경	김종혁	김충환	김형조
	강영권	곽효석	김경수	김대호	김상경	김영섭	김은섭	김주규	김치수	김형준
	강은현	곽희남	김경수	김도원	김상균	김영순	김은영	김주목	김태균	김형진
	강일환	구경이	김경아	김동영	김상영	김영실	김인곤	김주영	김태균	김형표
	강주현	구성찬	김경환	김동우	김상우	김영은	김인봉	김주종	김태동	김혜경
	강지영	구수정	김경준	김동욱	김상현	김영재	김인숙	김주현	김태수	김혜숙
	강창걸	구은경	김경철	김동율	김상희	김영주	김인영	김준	김태수	김혜순
	강창구	구자범	김경호	김래관	김생수	김영준	김인철	김준배	김태승	김호
	강창균	구찬희	김경환	김만기	김석준	김영준	김인태	김준식	김태영	김호
	강철규	권경우	김관영	김만수	김석환	김영철	김일수	김준영	김태완	김호경
	강철승	권기대	김관용	김명균	김선욱	김영철 (일하스님)	김재구	김준호	김태진	김호균
	강태철	권기범	김광배	김명임	김선필	김영출	김재구	김지연	김태현	김호성
	강태호	권동현	김광수	김명철	김선희	김영택	김재길	김지영	김태현	김호식
	강현신	권득용	김광현	김명환	김성균	김예은	김재성	김진경	김태현	김호연
	강혜정	권만열	김광훈	김모드	김성달	김오열	김재일	김진구	김태형	김홍규
	경민수	권봉철	김국주	김무준	김성수	김원래	김재하	김진만	김태형	김홍업
	계충미	권상헌	김규범	김문환	김성수	김원배	김재홍	김진명	김태호	김효선
	고강석	권순범	김규영	김미라	김성수	김원욱	김재화	김진섭	김태호	김효원
	고경일	권순식	김규훈	김미진	김성일	김용남	김재환	김진수	김태훈	김희연
	고경호	권순용	김근성	김미희	김성종	김용상	김정국	김진아	김태훈	김희철
	고성순	권순탁	김근수	김민수	김성태	김용섭	김정돈	김진필	김태훈	나권일
	고영일	권영준	김근철	김민정	김성필	김용숙	김정민	김진현	김평진	나병현
	고영희	권영진	김근초	김민주	김세진	김용술	김정수	김진화	김하양	나순팔
	고윤	권오진	김금숙	김병각	김세진	김용식	김정완	김진효	김학수	나일주
	고은주	권용습	김금태	김병구	김소라	김용철	김정욱	김찬동	김학수	나준희
	고은진	권용희	김기숙	김병수	김수영	김용하	김정현	김찬석	김한기	남기원
	고지석	권윤정	김기열	김병수	김숙희	김우비	김정호	김찬형	김한나	남상권



민희숙	박수행	박종원	백정숙	송기민	안인화	오현철	윤은주	이덕희	이승우	이종수	임용기	전인현	정진민
박건영	박순기	박주은	백진현	송다겸	안정혜	오희택	윤인오	이동석	이시연	이종열	임용찬	전필기	정진우
박경서	박순대	박준수	변동훈	송덕원	안중범	우호식	윤일성	이동석	이애화	이종윤	임장원	정경욱	정창률
박경숙	박순배	박중철	변상해	송미영	안지현	원동환	윤정섭	이동엽	이연재	이종희	임정규	정광화	정창운
박경준	박순상	박지원	변수원	송미옥	안진걸	원제환	윤종길	이동한	이영란	이주하	임종필	정덕민	정태근
박광태	박순옥	박지혜	변재근	송병록	안철원	원종호	윤종빈	이만호	이영범	이주희	임창빈	정동영	정태명
박광현	박순진	박진소	변창우	송병주	안효정	원혜영	윤준식	이명균	이영음	이준모	임태영	정만중	정태성
박근호	박시근	박진아	봉홍선	송수영	안희상	유관영	윤준식	이명진	이영종	이준영	장경완	정명채	정태완
박기서	박양제	박진우	서경호	송연미	안희숙	유기석	윤지원	이명천	이영주	이지영	장권	정미화	정택수
박기영	박연정	박진호	서순탁	송용석	안희정	유기천	윤진철	이명훈	이영호	이지훈	장동민	정병오	정필성
박기철	박영규	박진홍	서영덕	송원기	안희철	유기청	윤창원	이모세	이용곤	이진경	장병호	정병철	정혁제
박기훈	박영규	박찬호	서완석	송인섭	안희철	유기현	윤한필	이봉숙	이용배	이진영	장보름	정삼룡	정현우
박남규	박영기	박창욱	서윤석	송인윤	양광희	유남식	윤현식	이봉형	이용선	이진원	장석림	정상미	정혜승
박노건	박영남	박창임	서은경	송재경	양대규	유덕열	윤효상	이봉훈	이용승	이찬영	장상현	정상욱	정혜승
박달현	박영민	박철수	서정일	송하동	양동호	유동진	유영정	이삼열	이용재	이창민	장승진	정석원	정희성
박동렬	박영민	박철주	서종대	신동민	양두석	유동호	이갑수	이상룡	이용준	이창엽(참우님)	장삼영	정석희	정희창
박두영	박영수	박춘건	서종철	신동애	양문수	유록수	이갑수	이상범	이운항	이창엽	장영식	정선철	조강훈
박래수	박영웅	박춘호	서지훈	신동엽	양석영	유명진	이강운	이상복	이원식	이창효	장영열	정성봉	조강희
박미나	박영철	박치우	서직원	신동조	양성범	유병서	이건호	이상봉	이원재	이창희	장영오	정세진	조건영
박미선	박영환	박태선	서한송이	신동진	양세영	유승	이경락	이상엽	이원재	이철우	장영환	정세훈	조경민
박민수	박영훈	박태소	석기영	신두철	양수장	유애지	이경수	이상엽	이윤규	이춘수	장욱	정승상	조광현
박민준	박용석	박태영	석철수	신봉기	양연식	유연삼	이경숙	이상우	이윤배	이충현	장원규	정승준	조광희
박민진	박용정	박한용	선동수	신봉진	양원표	유인상	이경우	이상윤	이윤상	이태용	장원택	정승화	조규홍
박병오	박용제	박행우	선우인터내셔널	신상진	양유정	유인환	이경중	이상윤	이윤신	이태진	장유리	정연섭	조금자
박병일	박용준	박현진	선종국	신선철	양윤숙	유일용	이경태	이상은	이윤호	이학수	장은미	정연욱	조병익
박심종	박우석	박형근	설원식	신영철	양인준	유재경	이계인	이상진	이은기	이학용	장일진	정왕규	조성하
박성희	박원규	박해란	설창인	신영철	양창우	유재민	이광택	이상진	이은재	이한길	장재영	정용화	조성희
박성대	박원석	박호걸	성광식	신완기	양태열	유재욱	이광필	이상철	이의영	이한민	장정호	정운수	조성훈
박성렬	박윤수	박호영	성금성	신우현	양태훈	유재혁	이광필	이상희	이인영	이한범	장중철	정원철	조성희
박상울	박은아	박희영	성병화	신은정	양혁승	유종성	이광필	이석규	이일권	이한솔	장진희	정원철	조순열
박상인	박은현	박후근	성신	신인철	엄원중	유진상	이교석	이석기	이재길	이형섭	장찬홍	정윤영	조순홍
박상현	박응순	박훈	성윤숙	신정무	엄청나	유평준	이규철	이석제	이재길	이현미	장철기	정의정	조연성
박상형	박의용	박희령	성인제	신지영	여해경	유해신	이규혜	이석진	이재욱	이현재	장형환	정의호	조연정
박석현	박인선	박희선	소경섭	신철영	염규석	유형임	이균성	이선신	이재완	이형세	장혜령	정익훈	조용기
박선규	박인수	박희연	소진성	신태현	오경준	유현찬	이근식	이선자	이재운	이혜숙	장홍석	정인호	조은영
박선아	박재갑	반영철	손건일	신현호	오길영	유혜영	이근조	이상근	이재은	이호경	장희곤	정일용	조일흠
박선오	박재익	방상윤	손경익	심동준	오병일	유호림	이근태	이상민	이재임	이호섭	전대홍	정재영	조재연
박선희	박재천	방정혜	손봉호	심인석	오상준	유호성	이근환	이상복	이재중	이호욱	전병순	정재은	조재호
박성배	박점수	방중수	손상석	심종진	오세형	유희동	이금희	이상형	이정규	이화순	전병식	정재진	조정근
박성아	박정민	방효창	손성국	심혜정	오세호	윤건수	이기승	이소영	이정남	이화주	전봉양	정정래	조정훈
박성용	박정석	배동준	손성일	이름다운의원	오순택	윤득구	이기우	이승수	이정성	이훈	전봉진	정제용	조종운
박성정	박정식	배영환	손승태	안경숙	오승훈	윤명	이기용	이수연	이정현	이희중	전상룡	정종원	조종철
박성혁	박제화	배유아	손영환	안규창	오용식	윤상균	이기호	이수영	이정호	안치승	전상용	정주연	조종호
박성호	박종국	배집수	손재운	안기정	오장환	윤석호	이낙원	이수인(이주원)	이정후	임건목	전상욱	정준수	조주희
박성훈	박종근	배종석	손정근	안병선	오재명	윤숙자	이남경	이숙희	이정훈	임동범	전상철	정준영	조준범
박세권	박종선	배천호	손종보	안병익	오재문	윤여림	이다혜	이순기	이정희	임서구	전영진	정중식	조준형
박세원	박종소	배흥진	손호중	안영훈	오중현	윤영곤	이대열	이순배	이정희	임성희	전용배	정지연	조진만
박세준	박종열	백경아	손희준	안완용	오창훈	윤영천	이대영	이승대	이종규	임세은	전용일	정지웅	조진수
박세현	박종원	백요한	송계주	안용식	오현석	윤은선	이덕영	이승섭	이종길	임영환	전우영	정지훈	조진오

조철제	최은아	한연하	황철진	김동식	이현주	이태호	배동근	김봉래	이효숙	김만수	박준기	이상귀	강성철
조현	최완규	한영관	황호식	김미경	이희승	장영	서관승	김석래	임명희	김민수	박태원	이상천	강신재
조형선	최완영	한용환	황호열	김석기	임경수	장윤정	송정호	김선연	장선애	김상기	박혜수	이상호	강옥영
조현익	최원천	한태경	황훈주	김성수	임영희	장진영	신영욱	김선정	전규화	김상일	배동주	이양식	강옥희
조형준	최유영	함동균		김세용	임형백	전종찬	신중성	김재부	전방욱	김상호	백순환	이은경	강윤숙
주상희	최은진	함두호		김영	장명진	정경수	안춘훈	김재준	전영권	김석준	백승일	이용선	강주례
주인건	최은철	함영선	경제정의	김재령	전은호	조영관	위정희	김정근	정광민	김선심	서경수	이인우	강찬호
주정은	최인섭	함형욱	연구소	김재익	정상훈	추승우	윤영진	김중남	정석중	김세린	서원배	이장명	강희규
지동섭	최인호	허남중		김종길	정애리	하성용	윤태룡	김진숙	정세환	김수영	서주중	이장표	고미라
지동익	최일	허병녕	김길생	김준현	조돈철		이승규	김진욱	정의호	김승권	서현주	이정택	고영원
지영근	최장원	허병권	김범	김철홍	조우현		이우영	김태희	정의훈	김승한	석진국	이정화	고원철
지영석	최재민	허석	김지환	김태호	조재형	통일협회	이정호	김학근	정해진	김영우	성만호	이종우	고재원
지정희	최재용	허수범	김혁	김형욱	최강림		이정우	김형경	조무현	김영화	손동석	이주일	고형복
진영수	최정표	허정준	노영록	나인수	최두호	강남욱	이중수	김형근	조백훈	김옥희	손성미	이철용	곽도훈
진원석	최준혁	허종호	문인철	노두승	최명철	강만성	이진만	김황식	진수환	김용운	손은희	이헌길	곽은
진유식	최종길	허지영	박상안	노웅래	최봉문	강은석	이현희	노영성	최규천	김원용	손정식	이형로	구교형
진종화	최종민	허창재	백승호	도선봉	최윤정	고석주	이화용	목영주	최복규	김잠이	손진일	정민욱	구지환
차은상	최지한	현남원	백종호	류성룡	최정우	고유환	임홍승	박상덕	최송길	김재윤	송오성	장석주	권순남
차진구	최창배	형성훈	손창민	류중석	하동익	곽일환	장인석	박은남	최소희	김점수	송호석	전갑생	권혁이
채대영	최창호	홍광선	송운학	민범기	함승희	권수복	장형원	박인재	최승룡	김중현	송희자	전기풍	금강정사
채민석	최철호	홍대식	여은미	박경남	허도한	김근식	전규정	반태연	최우현	김진하	신미경	정길호	김기연
채원호	최철호	홍도천	윤언철	박상위	현철재	김동규	전영선	배정순	한동준	김철관	신미애	정보진	김경태
채홍석	최철화	홍미미	이덕호	박성우		김병조	정동욱	서은주	한민통일연구원	김창집	신부연	정석윤	김경표
천민승	최혁	홍성환	이승훈	박연환		김삼수	정승훈	송문길	함식	김중근	신용호	정선우	김경화
천병우	최호영	홍순관	이혜란	박영웅	시민권익센터	김성호	정창현	송민석	홍진원	김판열	신찬숙	조승재	김기영
최기일	최홍엽	홍영희	임효창	박정윤		김용현	조광환	송재석		김판희	심재국	조오현	김남권
최광규	최희수	홍원선	정길채	박찬우	김강준	김은수	주석부	신미영		김필성	안미나	조지경	김남현
최광웅	최희수	홍종학	정흥준	박희정	김상헌	김일한	최우진	신승춘	거제경실련	김한기	양광선	조허영	김남희
최광현	최희준	홍종화	천미림	배웅규	김석기	김장철	최광민	심규만		김현호	엄수훈	진성우	김다솜
최근환	추동균	홍준표	하능식	백인길	김영미	김재기	최호창	심윤보	강경수	니기석	여남권	진취재	김동범
최기환	추우성	홍준현	홍창시	서민호	김태경	김재연	추재훈	심재상	강병주	니양주	여정애	최삼주	김동진
최다니엘	크레텍(임주)	홍진구	황은경	서순탁	김태룡	김정웅	한정훈	심현섭	강성배	남기원	염경주	최선중	김민재
최덕천	프라이먼(스트라주)	홍창기	황정호	신형식	김택성	김정진	홍명근	양창훈	강연희	남덕희	오성관	최윤숙	김범오
최덕현	하상준	홍효진	심준신	김현아	김정현	황대중	원경숙	강윤영	강연희	남희정	오성주	하민철	김봉섭
최덕호	하성민	화강윤	양우현	나태균	김종구		윤도현	강정숙	노승복	오순혜	한경만	김봉화	
최명희	하용호	황경복	도시개혁센터	윤재용	대호관(세법인)	김주호	윤성원	강창수	노재남	육근호	한은진	김상열	
최범식	하윤진	황경하		이동근	박병식	김창석	강릉경실련	윤순모	강학도	노재천	육방호	한장용	김선호
최병철	하재현	황광열	고일두	이만희	서경수	김학성		이광중	경명자	노재하	육준금	함미경	김성자
최병준	하현아	황기영	공병준	이명수	신희권	김형만	고석태	이귀녀	고석진	류금렬	육홍석	허남두	김성희
최석준	한민통일연구원	황선영	곽도	이민석	심재원	노귀남	고재정	이규승	고영주	문상모	육혁수	허추구	김소윤
최성수	한상윤	황선용	곽충삼	이병준	유주상	당명숙	구광범	이숙희	권대용	문상필	우정숙	허희경	김수연
최성주	한상일	황선원	권영진	이상협	이대순	문행규	권상동	이요한	기산종합건설(주)	문성환	원소실	현정임	김수진
최성현	한상훈	황영미	권일	이양재	이덕우	박경서	권오석	이윤일	김경덕	박광호	유차상	홍성태	김승복
최수만	한석웅	황유경	김경희	이유미	이명근	박금해	김남두	이은주	김경섭	박대기	유천업	황분희	김애란
최수진	한선아	황이남	김광만	이은재	이순기	박용현	김남영	이정임	김경수	박명욱	유태영	황한성	김영근
최성섭	한성철	황이숙	김금옥	이재문	이영길	박은주	김대진	이제영	김귀호	박성호	윤길정	황황욱	김영미
최승우	한승구	황인구	김기성	이제선	이지연	박준우	김덕기	이주석	김기만	박순옥	이갑선	김영필	김용관
최연태	한승호	황인선	김덕기	이주희	이진	박준형	김동명	이지은	김대봉	박애숙	이도영		김용관
최영식	한승호	황정국	김도영	이창수	이창수	배인교	김민재	이진아	김덕률	박인근	이명화	광명경실련	김용길



김원선	박미정	손솔이	이말복	정은희	홍진호	김영환	배용태	이명구	정혜련	권보	배상길	정택동	김은재
김윤권	박미정	송경석	이명숙	정인에	황동식	김인수	백영대	이미경	조경록	권순서	백승국	조경래	김재용
김윤옥	박미화	송해나	이미경	정중환	황인란	김일호	백익순	이봉주	조광득	권윤택	변창우	주광정일(주)	김창호
김운재	박민관	송혜선	이미희	정지선	황재연	김재중	백종기	이상길	조교영	김윤옥	성병근	지대근	김희라
김윤호	박민영	신가람	이병렬	정진우		김재찬	버스조합	이상각	조선익	길호양	성중운	최근애	노상래
김은진	박복임	신통렬	이병순	정찬규		김정훈	변원섭	이상근	조성식	김경훈	소평진	최낙렬	문홍민
김재성	박상윤	신민선	이병철	정학균	광주경찰서	김지인	서문현	이상길	조인형	김귀화	송철원	최서규	박노수
김정	박서윤	신복인	이복자	정혜경		김창재	서민호	이승노	조재곤	김도형	신미정	최선경	박상훈
김정미	박성민	신선영	이부순	정희균	(유)용진에너지	김철현	서상기	이연	조현지	김동욱	신주식	최선호	박새봄
김정숙	박성배	신성은	이석석	정희진	(주)대한가스산업	김태욱	서상기	이은방	주호연	김보준	심재필	최연호	박수호
김정자	박승원	신성호	이성숙	조미수	(주)동원메디칼	김해룡	서재형	이인수	지명순	김봉교	양진오	최은경	박정민
김종임	박영훈	신수진	이성진	조범상	(주)영암마트	김현	서해자	이재석	지병근	김성만	오경숙	최지경	박지령
김종진	박옥남	신숙진	이송재	조상희	(주)해양도시가스	김현모	선종아	이재윤	지현도	김연고	오영재	표상욱	박지영
김진	박은경	신영옥	이승봉	조아라	강신주내과	김현석	설상욱	이정근	차현승	김요나단	유준호	하영백	박종수
김진경	박재금	신윤철	이양희	조옥경	강은섭	김현중	성윤형	이정량	채인기	김윤희	윤달근	허심덕	박평식
김진숙	박재철	신은숙	이연주	조은하	강정미	김효중	소범환	이정주	채형욱	김은희	윤상훈	허진	석경수
김진일	박재희	신혜정	이연숙	조태섭	고근	나미영	손성만	이정학	천재영	김용종	윤순덕	홍인수	송석암
김철수	박정선	신혜진	이영신	조해성	고려가스(주)	나병철	손점식	이종성	천형욱	김인순	윤종석	황효숙	송지영
김학준	박종기	심상록	이영호	조해주	고려가스	나성영	손희정	이종택	천홍석	김재욱	이관순		신예진
김현	박종미	심춘옥	이영희	조화영	(주)광주	나흥덕	송원식	이준영	최동기	김재훈	이덕수		신원배(이데주)
김현정	박종빈	심혜진	이원영	조흥식	고부섭	노희정	송윤주	이학균	최용석	김중배	이명숙	군산경찰서	심상선
김현정	박종익	안경애	이윤식	주명식	고영삼	류한호	신은희	임기춘	최윤정	김중욱	이명희		심재숙
김현채	박종혁	안석모	이은경	주태진	고형석	명노민	신재안	임동훈	최정구	김중을	이미경	강왕근	안중호
김현희	박주한	안철환	이은상	지미선	공수현	모현숙	심재훈	임상태	최종섭	김준희	이미숙	고계곤	양진우
김혜정	박준서	양금석	이은영	진장호	구희선	문정찬	안병주	임숙경	최주영	김진익	이민호	고덕영	양해택
김효숙	박진기	양기대	이은재	차병일	권충화	문혜옥	안영균	임영범	최진규	김진희	이상도	김부영	양희욱
김희수	박진석	양정현	이재춘	차성미	기우태	박광복	안현석	임용희	최진우	김철광	이상철	김영혜	오승원
나혜진	박춘선	양철원	이정희	차정운	김경미	박남규	양동윤	임정훈	하은이	김현미	이영애	김원태	우예현
남기표	박태준	양희연	이정희	최경자	김경원	박미정	양성호	임정휘	하주아	김형균	이원재	박은아	유애순
남윤화	방소현	오광덕	이중석	최경화	김경현	박병규	양한인	임종연	한명석	김취연	이원희	성광문	육순일
노병일	배권식	오영희	이현우	최문교	김광영	박병일	양해령	임현철	한성	김희진	이정건	세종기획	이경은
노신복	배덕현	오민석	이혜수	최미영	김근수	박상원	엄창수	임형채	한희주	김희철	이재수	심규만	이상운
노용래	배준	오성남	이혜진	최상철	김기보	박성수	여상구	임형철	허기석	나영란	이중률	최종희	이상춘
노혜숙	백용구	오해란	이혜진	최영자	김길현	박수인	오경래	장익수	허문수	나효훈	이창형	한화에너지	이석진
노희준	백정순	우동훈	이호석	최재석	김남수	박양우	오미정	장익	홍영신	노상진	이태동	홍관표	이선덕
류경희	변미애	우병설	이효성	최철규	김덕은	박용수	오주섭	장춘식	황덕자	라병희	임은기	홍기원	이유설
류미숙	변성수	원범재	임삼례	추규호	김동욱	박용	오지혜	전순위	황동현	박성도	임주석		이종암
류정희	변한주	유수연	임지연	하숙례	김동현	박이화	오지홍	정강택	황보관석	박성표	장기태		이현호
마이인	서두원	유홍우	임진희	한궁희	김병철	박정열	유방실	정두숙		박성표	장문석	군포경찰서	이희재
문진숙	서방자	유정규(생원생협)	장선	한상미	김상국	박종근	유영표	정병호		박순이	장세광		임구원
민찬식	서삼례	윤문선	장진아	한윤선	김성일	박종렬	유현	정상문	구미경찰서	박영주	장연덕	(주)아진화학	장명희
박경옥	서순자	윤승형	전중석	한창욱	김수영	박준곤	윤두중	정용완		박응도	장종길	곽도	전균섭
박계량	서용원	윤종미	정도환	한흥기	김순재	박찬숙	윤봉란	정원태	강명천	박이숙	장준우	국정아	정미순
박광수	서유리	윤철	정병오	허기용	김연순	박창기	윤봉영	정윤남	강승수	박재욱	장홍성	군포위생원(생협)	정미영
박기은	서은경	이강순	정상영	허정규	김영규	박창현	윤영돈	정은수	강신웅	박정구	전윤환	김대욱	조용석
박명은	서이석	이건복	정선유	허정호	김영길	박철웅	은광석	정일용	강현주	박정훈	전호갑	김석현	조재용
박문경	서태원	이금숙	정애숙	허정은	김영채	박태규	이계영	정찬기	고영호	박주영	정재봉	김애경	주상식
박미경	소문주	이기영	정유석	허창순	김영현	박형철	이길남	정찬용	구자근	박현우	정진수	김연승	차숙희
박미영	손선주	이로사	정은영	홍은선	김영환	배백호	이동민	정혜경	권구일	박형진	정택균	김영희	최강용

최병우	안철환	대구경실련	김상돈	문상돈	안영석	이연재	조규석	강재규	김패환	송인걸	이정(버리부)	한경이	김종석
최복희	양미화		김상진	문효상	안정민	이윤호	조락현	고나현	김태연	송주섭	이정호	한기평	김희환
최응환	양영재	주남부.계산	김상호	민영창	안중찬	이장수	조영제	고태선	김태현	신상헌	이정희	한동범	명근홍
최종식	어중석	갑신	김상희	박갑석	안화석	이재일	조문영	곽기용	김태형	신선호	이중범	한성림	문귀일
하수진	오미애	강연환	김석동	박경옥	양우준	이재필	조방희	구범림	김태호	신현진	이철은	한원중	문영덕
한성수	오흥미	강점문	김선완	박대경	양원규	이정웅	조성제	권은남	김태훈	신혜영	이형복	홍성연	문웅
황유민	웅심이칼국수	강호윤	김선희	박동환	엄봉훈	이종경	조영도	권의경	김현정	신희권	이혜진	황의달	민경준
황은아	원용벽	경희창	김성택	박병석	에스제이건설(주)	이지영	조용식	권재구	김현조	신희영	이홍범	황재익	민찬홍
	유양욱	계양인종합상사	김세화	박병준	여우현	이진태	조용원	권종숙	김현하	심영주	이화영		박강일
	유영록	고무영	김승환	박병호	오병찬	이진현	조인지	권철명	김형태	심응무	임성복		박근영
김포경실련	유호석	공영선	김신호	박승철	오서운	이진희	조정학	김경희	김해천	안병진	임윤택	목포경실련	박문욱
	윤영자	공재식	김영권	박영식	우동락	이창근	주태환	김금숙	김홍숙	안영찬	장복수		박미영
(주)남도상사	윤미숙	공정옥	김영기	박용진	우형택	이창웅	지우	김기남	김환식	안재준	장인성	강병국	박석일
(주)신원렌터카	이경화	곽덕환	김영모	박은영	유성근	이해숙	지창수	김기범	노경옥	안중호	장인철	강병조	박성일
강명자	이경희	곽동주	김영섭	박재락	유성호	이형태	차재민	김길순	남희민.한진(주)	안중훈	장형근	강상태	박상진
김남규	이기형	곽왕구	김영애	박재열	유영익	이호만	차진근	김대석	대림유통	양미경	장화식	강영태	박세훈
김두관	이두열	구성호	김요한	박종률	유영환	이호석	최동학	김동선	도남선	양석희	전국진	강제석	박소영
김문경	이부형	권기억	김용두	박종익	유양근	이희영	최우곡	김동철	명용식	양승의	전영춘	강주천	박승춘
김미자	이윤학	권대우	김용찬	박종철	윤동섭	임윤섭	최원아	김명경	문경재	오세운	전혁구	권인철	박승채
김영로	이재홍	권동일	김용현	박준상	윤태우	임종오	최은영	김명제	문정수	오종섭	정상배	김경순	박승욱
김용훈	이정규	권병훈	김위상	박한승	윤현식	장석희	최종만	김명주	박근영	오학석	정상훈	김경욱	박영용
김종열	이정수	권오숙	김요호	박해식	윤형석	장우석	최준호	김병국	박상도	우금옥	정상희	김경철	박용묵
김준현	이종기	권오준	김인수	박희경	윤홍식	장원용	최한석	김상환	박상민	유기완	정우택	김관욱	박인용
김진희	이종준	권윤집	김재범	배은정	윤희주	장은숙	최희재	김성민	박성진	유병연	정은선	김광배	박정석
김창집	인희옥	권태윤	김정렬	백승호	이강태	장재현	최현숙	김성용	박영순	유인수	정인구	김광창	박정희
김철경	정일환	권택중	김종건	변규현	이경란	장해열	하순화	김성태	박종대	육정미	정현재	김대근	박종두
김형창	정정숙	권휘동	김종웅	변부형	이경애	장호경	한상인	김양호	박종석	윤경수	정희대	김두영	박종범
남기후	정희상	기영식	김종태	서영대	이경탁	장호열	한승훈	김영기	박준혁	윤주병	조민정	김명숙	박창수
남인선	조근휘	기일형	김종태	서정걸	이경화	전상윤	한중해	김영석	방명덕	이건희	조석귀	김명진	박창윤
도현선	조민진	길성민	김지현	서종철	이근원	전상훈	하인설	김영주	방정희	이경옥	조성천	김명철	박철수
류문식	조승현	김강식	김창수	성윤상	이기훈	전성욱	홍승용	김영희	방동국	이계자	조순오	김문재	박한호
류승범	조영철	김건식	김천수	성창환	이길원	전영권	홍승환	김욱	백효상	이광자	조승래	김민희	박해령
문태식	조용문	김경민	김천일	손광락	이동수	전영선	홍희청	김원숙	백정웅	이광진	조용석	김보현	박학진
문현미	조용식(명신한의원)	김남훈	김태선	손상오	이동영	전재호	황광석	김원희	김원희	이동준	조용제	김성두	박헌희
민경환	조종석	김대식	김태수	손상훈	이동호	정경선	황락규	김은주	변판섭	이범규	조항범	김수경	박홍식
박광근	주남부.계산.계남	김대진	김태우	손승완	이미정	정성윤	황병일	김응배	서동국	이병승	주옥규	김승호	배상기
박만호	채신덕	김도영	김학준	손호진	이병화	정연욱	황재석	김응하	서영석	이선경	주정봉	김신규	백재봉
박병돈	최영미	김도한	김현조	송상수	이병희	정영은	황정현	김인철	서영완	이성일	정현우.계남	김영태	서이재
박성현	최재웅	김도형	김형수	신동기	이봉우	정은숙	황종숙	김재경	서재열	이승복	진동규	김예영	송미숙
박연희	한재혁	김도형	김효진	신록휴	이부용	정인식		김재석	서정원	이승용	진동섭	김정민	송영중
박정원	한해경	김동석	남동강	신명희	이상록	정재근		김중하	서준수	이시혜	차정민	김정아	송진호
박태순	허우섭	김동철	남동현	신영섭	이상운	정제영	대전경실련	김중학	서해림	이애정	최경호	김중숙	송홍범
배건웅	홍석만	김명수	남윤환	신원호	이상천	정춘수		김주홍	서홍원	이영수	최경훈	김중익	송희진
백종일	홍성도	김명혜	남인철	신종식	이상필	정태완	(주)동그랑	김지윤	성기석	이용훈	최낙구	김중호	신관용
신광하	홍철민	김무중	노광해	신흥권	이상화	정현영	(주)마루농산	김진숙	손대근	이윤숙	최미선	김창세	신재범
신영순	황규숙	김미화	노영희	심병철	이석형	정해용	(주)해림푸드서비스	김진영	송민호	이유행	최봉문	김태중	심재경
신상천	황인문	김민석	노윤경	심준섭	이선혜	정휴준	강다은	김창근	송영환	이인세	최이성	김태현	안영하
심상용	황인순	김범현	류규하	안경완	이성	정희교	강명자	김창숙	송유숙	이재민	최장환	김판조	양명희
심영섭		김병구	맹일영	안병천	이성우	조광현	강승연	김충신	송윤	이재영	최정우	김하성	양승희



양영주	천현중	고정연	김석호	김주호	문상철(2)	서경국	신철성	유재기	이성환	장문숙	정지금	최신아	강석태
양판승	최명숙	공병승	김선년	김주희	문재천	서미화	신항님	유재엽	이성훈	장문정	정재영	최성관	강신길
어성준	최병기	구명중	김성권	김준기	민남순	서범수	신현무	유점자	이성혜(2)	장봉주	정태호	최수영	고영진
오민정	최연식	구주영	김성근	김진	박도영	서봉원	신혜숙	유정기	이승우	장성호	정하윤	최승환	고인선
오승주	최완수	구효승	김성길	김진필(2)	박미경	서수금	심근해	유정동	이영갑	장윤석	정한성	최원석	고한주
오형열	최일	권명섭	김성수	김진현(2)	박미순	서양수	심미예	윤강훈	이영신	장재구	정해균	최원용	공정관
원오준	최종명	권범현	김성열	김진홍	박미영	서은정	심삼조	윤경만	이영호	장준흠	정현돈	최은주	곽병용
유경생	최호길	권오성	김성춘	김창희	박복용	서종석	심삼구	윤경태	이옥형	장지태	제미경	최을림	곽중환
유광호	최환석	권은경	김성훈	김철근(해성스님)	박봉수	서현국	심윤정	윤나영	이용주	장해욱	제연화	최재명	김철
육준해	하상복	권재현	김성훈(2)	김철도	박석원	서현식	심윤정(2)	윤상미	이용학	장희정	조명래	최재호	김경석
윤치술	한상호	권태섭	김성훈(3)	김태경	박선아	서호영	심재준	윤석준	이원경	전보익	조명제	최진욱	김경순
이명희	한태연	김기아	김수미	김태구	박성수	석승희	심형철	윤성미	이위덕	전선임	조상희	최철원	김경식
이문희	홍건숙	김갑환	김수빈	김태우(3)	박성철	석진열	이영아	윤수성	이윤석	전세표	조양래	최현덕	김계남
이범수	홍국선	김경일	김수자	김태훈	박세간	선근우	안경옥	윤영태	이은화(2)	전우철	조연승	최혜경	김남춘
이병재	홍근표	김경조	김승주	김태희	박승제	선석렬	안문상	윤재성	이을찬	전일수	조영규	탁영민	김동수
이상권	홍석준	김경택	김쌍우	김학진	박시우	설광석	안병록	윤재철	이일용	전진영	조용규	하상철(2)	김동순
이인수	홍순길	김광식	김영길	김해몽	박연수	설호석	안연균	윤재현	이재정	전찬일	조용언	하성훈	김말순
이재광	홍진표	김길수	김영신	김해영	박영봉	성병창	안원하	윤정현	이재호	전현수	조용한	하순금	김명섭
이정진		김남식	김영옥	김향남	박영현	손병열	안원호	윤지영	이정남	전호열	조유장	하주수	김미정
이종화		김남일	김영옥(2)	김현옥	박용주	손상용	안재민	윤태환	이정민	정광현	조윤득	한기성	김미정
이찬식	부산경실련 김달기(문구장님)		김용섭	김현재	박용하	손순용	안종일	윤현철	이정식	정권영	조윤환	한병무	김병욱
이천호		김대래	김용원	김형균	박용한	손영일	양대건	이강진	이정항	정규용	조은정	한병철	김부석
이철수	(주)경성에너지	김대중	김용필	김혜경	박윤기	손정현	양동열	이경덕	이정호(2)	정근	조종석	한상준	김상기
이철호	강경태	김도	김유경	김혜경(2)	박재본	손창욱	양시경	이경학	이정환	정기섭	조준영	한성국	김선일
이한경	강규성	김동영	김윤영	김혜신	박재욱	손창우	양은진	이귀순	이정훈(2)	정달식	조지혜	한성안	김선철
이한중	강대영	김동수	김은숙	김호범	박재울	손치훈	양재화	이규섭	이중석	정도영	조홍규	한소리	김성근
이형오	강미라	김동연	김은영	김홍재	박재홍	손현식	양중필	이규현	이중원	정동만	조호제	한재철	김성미
이형환	강민석	김동호	김인한	김홍태	박정구	송미경	양진원	이남기	이중학	정동열	주수현	한중석	김성욱
이홍성	강민정	김명석	김장성	김홍취	박종덕	송순임	양세원	이남중	이주영	정말순	주식회사무학	한효준	김성용
임종석	강병석	김명섭	김재경	김훈	박종수(2)	송원섭	여재호	이동윤	이주환	정명길	주안나	허두불	김수자
장미	강병호	김미경	김재명	김훈태	박진성	송은주	오병루	이동일	이주환	정명식	주재민	허민도	김수정
장민숙	강성욱	김미경(2)	김재식	남경태	박찬일	송재광	오상준	이동진	이준승	정명희(2)	지경아	허진욱	김순복
장중국	강성태	김민철	김재일	남기찬	박철중	송재은	오상환	이동환	이중하	정미경	지은아	허해녕	김순봉
전중국	강시명	김백철	김재찬	노경조	박철한	송정숙	오세룡	이동훈	이진수	정민재	진동식	현지훈	김승길
전철균	강예운	김병기	김정량	노광진	박태주	송종우	오연석	이동희	이진수(2)	정상문	진수진	홍경자	김승숙
전철영	강유동	김병용	김정민	노상훈	박한규	송종화	오지영	이두호	이창재(경성유업)	정상문	진효상	홍봉선	김승철
정남준	강인중	김병하	김정수(2)	노영욱	박희선	송중환	오철조	이만수	이춘구	정세자	차동박	홍일표	김시형
정명오	강정규	김보엘	김정숙	노일용	박희영	신경근	오태석	이명식	이학봉	정순영	차동욱	황범하	김연미
정승민	강주하	김복준	김정숙(2)	노효길	박희정	신군재	옥성애	이미경	이현우	정애니	차진구	황보승희	김영석
정영창	강중묵	김봉규	김정순	도한영	방성애	신동욱	옥진우	이민호	이현제	정용성	차창호	황영식	김영식
정진대	강태문	김부근	김정택	류강렬	배광호	신만석	왕인	이병기	이현주(3)	정용수	천병훈	황인	김영아
정호원	강필원	김부민	김정현	류위훈	배성훈	신병훈	우명자	이병준	이훈진	정은호	천상수	황인구	김영호
조기석	강해상	김보이	김중구	류은영	배수미	신상구	우성철	이병진	이희길	정장한	천용욱	김응일	김응일
조성익	강형숙	김삼문	김중기	류재중	배용준	신상해	우정용	이병호	임무진	정재호	천정호	김원기	김원기
조순형	경규성	김삼수	김중기(2)	류정호	배혜래	신성환	원허	이봉진	임우택	정중학	천현수	속초경실련	김원일
조영교	고명석	김상길	김종민	류종성	배화숙	신승균	유수윤	이상백	임종수	정중화	최남연	김유경	김유경
조용호	고순생	김상배	김종한	류진호	백평호	신영호	유영명	이상진(2)	임호	정진교	최달용	(주)강원으로	김유리
조준범	고인홍	김상태	김주영	모삼선	변희중	신유천	유영택	이선희(2)	장귀봉	정창오	최병근	강동우	김은희
차경아	고재일	김석준	김주현	문규성	부두봉	신정희	유완식	이상권	장다감	정춘희	최보규	강미심	김인섭

김일환	박종학	원은주	이철	최영미	김미정	박재관	윤희경	임채란	한창석	주지은	김영희	박양희	이경진
김재학	박종현	유성봉	이태열	최용석	김민수	박재순	이경섭	임태정	한풍교	형근혜	김옥경	박영옥	이근미
김정식	박종훈	유영민	이필선	최유정	김복녀	박제현	이경환	임혜경	허성균	홍상우	김옥수	박영준	이미숙
김정인	박희식	유영창	이필순	최중현	김봉균	박준배	이금희	장영옥	허윤범	황금영	김유경	박정희	이민근
김중훈	반영덕	유종완	이현미	최지문	김성연	박찬호	이길영	장성근	허현태	황의병	김윤재	박종호	이벽희
김중담	방대식	유주희	이호석	최지인	김시영	박태경	이명옥	장점숙	홍사준	황인옥신	김윤희	박준연	이병욱
김중윤	방원욱	유혜정	임대식	최진철	김영기	박화진	이범선	정계화	홍영호	경과의원	김은주	박태순	이선희
김주철	배석진	윤광훈	임시연	최춘파	김영래	배창수	이범주	정문호	홍중수		김정란	박해부	이선희
김준섭	변성수	윤규식	임종희	최택수	김영태	백혜련	이병희	정성균	황경희		김종길	박홍래	이수정
김진태	변인미	윤기순	장경민	최형덕	김완동	변영선	이상명	정수진	황대호	안산경실련	김종익	박희경	이숙경
김진태	변인신	윤신남	장성원	최혜경	김용일	서상범	이상애	정순혜	황민석		김지영	배종민	이숙란
김진희	서영기	윤재훈	장은선	최효섭	김용철	서수정	이성호	정양훈	황성우	강경호	김지영	백영국	이양주
김천수	서은진	윤재희	장재수	탁동철	김웅	서정근	이성희	정원재	황용원	강기성	김지훈	백지수	이옥희
김철민	석명한	윤정은	장재환	황영민	김은주	서환	이수행	정지운		강수진	김창근	서정열	이용진
김철수	선영복	윤준	장주열	한살림	김은하	서흥석	이승호	정태정		경상수	김창모	서혜경	이은영(청림센터)
김철환	소문섭	윤지숙	전용성	한상민	김재기	성기원	이애형	조경두	순천경실련	고관	김창섭	석진성	이정민
김춘식	손병섭	이건욱	전이령	한성희	김재성	성명순	이영인	조규만		고미나	김창하	설점순	이정아
김충남	손재복	이경상	정봉재	한정숙	김정욱	성현구	이영주	조병모	강성민	고영인	김철환	성준모	이주옥
김태영	송경희	이경애	정상철	함국기	김종석	손성배	이용욱	조석환	강철호	곽도훈	김초환	손현주	이창수
김형걸	송제철	이관	정소희	함준식	김종선	손현미	이용호	조승백	강현주	곽병용	김춘호	송창식	이찬환
김형기	송중철	이기원	정양언	허우리	김종오	손혜정	이운창	조영춘	김미정	곽태영	김춘호	신남균	이필상
김호준	신대섭	이대복	정연미	홍련암	김종환(한국사회연구소)	송명기	이원욱	조은석	김선명	권은심	김태훈	신동국	이혜내(하용녀)
김희근	신선익	이돈섭	정용주	홍명관	김준혁	송원찬	이원재	조형훈	김성준	권태근	김해만	신윤관	이현신
김희정	신영근	이동균	정원모	홍인숙	김지란	신경환	이윤규	주광애	김원우	김경민	김해정	신창환	이희대
남상진	신오일	이문규	정윤희	홍전희	김진한	신동섭	이의봉	주영수	김윤아	김경숙	김현삼	신청하	이희연
노금희	신재민	이문성	정은희	홍해용	김창극	신지훈	이재득	주영훈	김중선	김경애	김현호	심규호	임명자
동병희	신종출	이문영	정진용	황시영	김충관	신한미	이재문	주윤철	김종욱	김경하	김형욱	양근서	임미선
라용일	신창승	이미경	정홍기	황영필	김해영	심재광	이재식	지영호	김준호	김기범	김해숙	양태호	임현규
문재용	신현식	이봉진	조광덕		김현태	안필규	이재학	진대운	김지훈	김기희	김혜영	양현석	장동균
민현정	신희사	이상정	조명수		김혜련	안혜영	이정원	진승주	김현덕	김대일	김호득	오관영	장동일
박경미	심삼옥	이상호	조성열	수원경실련	김호근	양우혁	이정하	진한중	니창수	김동규	김화국	오남숙	장미진
박경심	심연홍	이수영	조현국		김훈	양재철	이종령	최문태	박재현	김동인	나정숙	오은석	전준호
박경자	안경민	이언우	주대하	(주)영광빌 - 회장	나민수	양진하	이종만	최병정	비손이앤씨	김명연	남기순	오정소	정명숙
박근철	안국자	이열호	주영래	강미경	나태성	양순석	이종주	최석환	서용현	김미영	남양숙	오진호	정세진
박덕희	안세준	이영선	주용현	강민철	남택진	염규용	이주연	최성배	송경식	김민	도원중	오현주	정승현
박만용	안종석	이영수	진장수	강인선	도진욱	예인기	이주현	최영숙	신현일	김민진	류영숙	오현주	정안철
박명중	안종원	이영순	진형배	강학천	명홍진	오동석	이진성	최운호	오정록	김병재	문강섭	와이즈컴	정연주
박병훈	양언석	이우영	천성미	강희진	모성은	오세환	이찬용	최인수	위미영	김복희	문버들	왕은희	정연철
박성준	양영희	이은희	천성필	고병익	민경록	오완석	이창모	최인자	이상휘	김삼엽	문연숙	원미정	정용기
박성진	양진욱	이인숙	최관식	고재홍	박다예	오일웅	이창진	최진학	이욱기	김상혁	문정원	위성태	정은식
박성한	양해준	이재선	최근석	권영옥	박동선	오지현	이판수	최진환	이중철	김석웅	문혜령	유창희	정은혜
박세찬	어주하	이재정	최길순	김경수	박복자	오해경	이필근1	최찬호	이천오	김성봉	민병권	윤다미안	정이진
박수경	엄경선	이종섭	최돈환	김경호	박승원	우양미	이필근2	하만효	임승규	김세영	박경용	윤명숙	정정순
박승민	엄태영	이종식	최동권	김기덕	박완기	유상태	이해균	하순진	장동식	김세원	박경중	윤상민	정종길
박영덕	오광택	이종식	최동훈	김도형	박용환	유재성	이현미	하창호	장현철	김승철	박경태	윤성웅	정주호
박영희	오모현	이주연	최서호	김동선	박원호	윤귀현	이현순	한경수	정순관	김숙희	박금자	이갑순	정진욱
박용기	오승택	이종길	최성주	김동원	박윤환	윤두천	이희수	한경희	정은희	김영림	박동신	이강숙	정철욱
박정민	오윤택	이진여	최승명	김말순	박은호	윤미경	이희숙	한곡지	조병록	김영숙	박승렬	이경란	정해욱
박종갑	오홍렬	이진형	최애리	김미선	박익중	윤석신	임용순	한창균	조택용	김영애	박승희	이경석	제종길



조경래	김성동	성종규	이수진	최석운	배선주	구경혜	김순업	문승욱	서성원	우순애	이승남	임선미	지효숙
조안호	김수은	손호준	이승용	최성범	서영남	구준모	김연희	문연래	서원교	우순희	이양순	임성규	진선중
조은정	김소옥	송영현	이연호	최성은	서호영	권광일	김영근	민승례	서은숙	우종만	이영식	임성식	차은은
조재기	김순이	송영배	이영주	최소영	성창희	권순원	김영숙	박경룡	서정순	우현녀	이영우	임승한	채봉수
조충현	김양수	송요찬	이완용	최영보	신재현	권순원	김영자	박경미	서희숙	원경희	이영채	임은혁	천기영
주만수	김여진	송진원	이용성	최영식	심경택	권영미	김영자	박기환	성주영	원중순	이영현	임철만	천병기
차은숙	김연호	신권대	이은주	최영준	심재수	권영배	김영준	박명순	성희연	유경윤	이영훈	임현권	천재영
채수아	김영선	신도선	이의협	최예슬	안성용	권영진	김영춘	박명철	송경은	유상열	이옥희	장경자	최대규
최경숙	김영학	신민희	이지형	최진식	양삼덕	권영훈	김옥자	박병건	송영득	유상희	이용근	장고환	최동규
최복수	김영한	신상문	이정숙	최화영	오승식	권오섭	김왕곤	박병대	송영득	유승열	이용만	장영란	최병주
최영화	김용필	신승봉	이정희	하보균	윤주현	권오주	김용섭	박상욱	송이식	유재경	이용연	장원섭	최병탁
최운	김은미	신승한	이종인	하신호	이상미	권혁봉	김용태	박상용	송정호	유재춘	이우정	장원주	최복순
최윤정	김은숙	신영희	이지연	한민석	이식	권혁양	김우재	박상임	신계영	유혜란	이운용	장재훈	최성원
최임이	김일구	신정원	이지은	홍성현	이유형	기보중	김윤경	박선규	신덕선	윤광석	이윤숙	전상진	최옥명
최재우	김주남	신희정	이창복	홍승희	이정희	김준	김은이	박선영	신동신	윤남선	이은자	전성호	최용철
최재필	김지연	심민규	이철규	황규영	이철	김강산	김은하	박성희	신동윤	윤남용	이의성	전영석	최은용
최현수	김창현	심재식	이태환	황순찬	이평호	김경건	김은희	박수자	신동천	윤수영	이익재	정병관	최은실
하은희	김한일	안경모	이향란	이향월	김경률	김의섭	박양래	신두임	윤수영	이장우	정선옥	최인근	
하혜경	김해남	안영일	임다정	임호상	김경림	김인기	박옥선	신영호	윤준호	이재범	정성기	최인식	
한수연	김현진	안은경	임승기	여수경실련	장준배	김경자	김재순	박인	신원재	윤태범	이재학	정순현	최재화
현유경	김후승	안정희	임정지		정남숙	김경중	김재임	박인오	신은순	윤향숙	이정길	정승수	최정관
형찬호	남화선	안태희	임진택	강규호	정대훈	김경화	김재홍	박일엽	신중욱	윤희태	이정숙	정옥형	최정숙
홍경남	노국환	여현정	장영달	강성훈	정승환	김광식	김정수	박재선	신중욱	은종원	이정형	정유리	최정화
황영순	류호웅	염충	장현실	강용원	정정식	김광민	김정천	박재우	신철승	이강문	이중송	정윤지	최중
황현주	박기두	오경아	전승희	고용국	정주현	김금녀	김중원	박전희	심관보	이강수	이중한	정윤희	최중
	박민기	오성탁	전재은	공성식	정차섭	김기석	김진영	박전희	심규대	이경수	이주윤	정은영	최종악
양평경실련	박민정	유기용	전재현	권동채	제윤경	김기열	김진용	박정하	심형모	이경호	이준호	정은희	최충봉
	박보정	유남숙	전종덕	권인홍	조현혁	김기은	김진창	박정화	안병운	이광석	이중재	정인우	최현희
	박석두	유상진	정동균	권진구	천상국	김기태	김창균	박종구	안봉섭	이광윤	이진관	정일구	하맹수
강병국	박성애	유선영	정연경	김동식	최경자	김길홍	김창수	박종오	안신일	이광재	이진혁	정춘화	하정순
강신우	박성진	유영표	정연준	김동채	한병세	김대축	김춘자	박종욱	안재영	이광호	이찬우	조경국	하태길
고봉철	박수경	윤경일	정영수	김명주	한해광	김두환	김학경	박준모	안정민	이기훈	이창규	조계만	하헌홍
고혜란	박수형	윤덕구	정주영	김미순	홍신아	김미혜	김학재	박창근	안창호	이길수	이창수	조길문	한덕이
구민진	박애경	윤수영	정하성	김성춘	홍춘식	김병기	김학훈	박창근	안철한	이길윤	이창수	조남술	한덕이
권오병	박옥경	윤정원	정혜경	김숙자	김병수	김현숙	김창렬	양정분	이대현	이천수	조생남	한돈집	
김경수	박장수	윤종대	조경숙	김신	김상실	김형식	박태문	양희진	이명신	이춘석	조용월	한만준	
김경철	박태원	윤형로	조삼현	김영표	이천여주	김선우	김호열	박태문	엄기홍	이미희	이중환	조은미	한순택
김경희	박현일	이경우	조선희	김점자	경실련	김선일	남기태	박형국	엄태희	이박우	이한표	조정래	한영순
김광윤	방민경	이그루	조재국	김정선		김선희	남용대	박홍재	엄희용	이백선	이해철	조정숙	한영옥
김남신	배만병	이대형	조춘선	김중구	강경모	김선희	노필원	배경희	여재혁	이복수	이현숙	조종성	한은상
김대우	배연정	이동연	조항욱	김주환	강석림	김성국	대구경북경실련	배정수	여한수	이부경	이현숙	조철현	한은상
김덕현	배우한	이동준	조현주	김향우	강신욱	김성국	류시근	배종열	오근철	이상년	이현호	조춘순	한정민
김동운	백종덕	이동진	조효미	김희선	강영애	김성길	마상호	변영구	오명환	이상원	이현희	조택선	한정현
김동현	서동일	이명규	지은숙	박병규	강정순	김성완	마석홍	변정해	오병재	이상태	이호돌	조택선	한준학
김명주	서상섭	이영춘	진랑규	박복숙	강창영	김성재	마석홍	변정해	오석호	이상혁	이호영	조한영	한준호
김명혜	서시은	이미순	채현	박선애	고경애	김세동	마세진	부태길	오성순	이석환	이호일	주상운	한준희
김민섭	서진숙	이반석	채풍목	박성현	고윤지	김수동	마애진	빈종진	오성용	이선	이훈	주상운	한희자
김민정	선종훈	이선희	최갑주	박숙희	고인정	김숙현	목현실	빈종진	오형선	이선정	임명원	지소연	함연자
김병옥	성문현	이수연	최두영	박연호	공미선	김순업	문미자	서면법인에이티브	우근배	이상훈	임상열	지정철	함연자

허림	김계원	김재식	박옥수	양광범	이용우	정재영	허우범	윤영수	김택술	김선호	이성호	김상철	유영길
허범석	김관호	김재영	박준용	양의만	이용준	정재윤	허주형	윤태영	김현	김성수	이유근	김성현	유영진
허수행	김광업	김종길	박찬화	양희석	이원구	정지은	허창희	은영주	김현	김성준	임숙자	김세근	유재영
허임범	김광호	김종욱	박한정	엄연주	이의재	정진오	홍기석	은용우	김형보	김세검	임정현	김수용	유진영
허임범	김근영	김종호	박현숙	에스지이(주)	이일희	정창훈	홍옥표	이민호	문성대	김수연	장성욱	김영호	윤권중
허준환	김남돈	김종화	박형수	여승철	이재학	정철	홍인성	이보향	문정수	김승필	장원석	김용진	윤예숙
홍경아	김대중	김준우	박형중	오경환	이정림	정화석	홍인식	이승현	박래수	김신순	장정훈	김재완	윤일규
홍성동	김도영	김진영	박홍열	오광민	이정윤	정희윤	황규철	이영식	박영민	김양보	정상철	김중우	윤정삼
홍원표	김동우	김진희	방수환	오영선	이종일	조광희	황덕성	이장춘	송민수	김영남	조문수	김진태	윤주만
홍은하	김동호	김창선	방호운	오월명	이주영	조동암	황수연	이재윤	유사현	김영희	조시중	김철수	이경주
홍종민	김두영	김칭우	배성수	오원선	이주용	조영희	황용선	이점수	이광호	김우준	호진	김태명	이계환
황경애	김명석	김태호	배승휘	유동현	이준한	조용철	황재우	이정	이상길	김원규	한남석	김태호	이영근
황규문	김명제	김태훈	배철현	유승분	이지영	조용화		이현희	이상실	김은숙	한용환	김행조	이병덕
황규문	김무룡	김하운	백동수	유준호	이진준	조현경		임규삼	이용관	김익태	허정아	김혜영	이상일
황인동	김미경	김학무	백민섭	유진성	이찬우	조현준	전주경실련	임명진	최중범	김인성	현경호	김홍철	이상춘
황인재	김미영	김현식	백완근	유홍성	이창훈	주춘식		임성진		김인영	현계담	김효실	이상호
황현숙	김병우	김효정	정원인(주) 박영희	윤관옥	이철준	지석	강원균	장석재		김정수	현성곤	나이란	이서영
	김병철	김희연	변성준	윤대기	이충우	진혁화	강우정	전기환	제주경실련	김중훈	현종철	내일시스(주)	이신열
	김봉수	나영우	변태수	윤동구	이한용	차경열	강창수	정세윤		김진심	현창석	노덕우	이수현
인천경실련	김상길	나종팔	서민인(주) 박영희	윤명철	이행숙	차광윤	강한민	조선환	강경희	김창기	홍기홍	노순식	이순곤
	김상섭	나종훈	서경옥	윤미선	이현경	차동열	강호수	조찬완	강봉석	김창연	홍서희	류임상	이승열
(주)디씨알이	김상열	남봉현	서부길	윤지의	이현준	차득기	고동우	주재호	강영준	김철수	홍성화	류지현	이원자
(주)진영(주) 박영희	김선홍	남세종	서용성	윤찬준	이형구	최광용	곽기우	진정현	강예달	김형수	황경수	맹창호	이재천
(주)한성라	김설	남지승	서태원	윤호	이후삼	최광은	국승철	채주석	강우심	문건식	황병철	명진아	이정순
인강경하	김성근	남창섭	서해안	윤희정	임병구	최금행	권미경	천상덕	강인창	문영실		박동수	이중필
강덕우	김성수	남흥우	성기건	윤희택	임승관	최두영	김만식	최낙용	강정임	박미현		박미경	이중호
강명선	김성태	노국진	성덕규	이경우	임준택	최병길	김병석	최동성	강지용	박승훈	천안아산	박민숙	이철호
강명수	김수자	노승환	성용원	이경진	임채훈	최상희	김수환	최문희	강창균	박재완	경실련	박민자	이혜린
강상곤	김승남	도영문수(주)	손병옥	이귀복	임한택	최선애	김용권	최수진	강태운	변성연		박복연	임승안
강석	김승희	도시성	손장원	이근영	임현준	최성원	김용휘	최요일	고광희	변정철	강민숙	박상면	장기수
강석철	김시철	류병희	송경희	이기태	임희숙	최성을	김장기	최정일	고미선	변종욱	강용봉	박종갑	장순이
강옥엽	김연옥	류제홍	송문성	이길성	임희진	최성진	김종원	최진희	고병기	부상원	강은선	박종복	장원철
강인덕	김연옥	명성목	송원덕	이다비	장일진	최순자	김주희	한병규	고봉수	송석연	강인영	박태서	장재식
강정호	김영구	명창준	송인선	이도희	장정민	최인용	김형식	홍순필	고성봉	송승	강태운	백우현	전소예
강태경	김영국	목동훈	송태영	이동기	장조영	최일동	라형연	황병해	고석건	송승호	강희두	복아영	전오진
고덕봉	김영옥	문상범	신국철	이루다	전동춘	최재혁	박규만		고성봉	신용현	고영술	서상욱	전옥균
고성일	김영준	민근홍	신나영	이리라	전무수	최정자	박명수		고영수	안영철	구본영	소삼영	전종환
고재성	김옥산	박경호	신병철	이린우	전성식	최정철	박명진	정읍경실련	고영식	양백윤	구자형	신대식	정관순
고정규	김용구	박명희	신은철	이문의	전영진	최준혁	박복희		고정훈	양복심	금명기	신동현	정구봉
공규현	김용미	박상찬	신종한	이범열	전용성	최찬용	박상민	강창조	고태식	양봉석	김경은	신명호	정미영
구자길	김용민	박상희	심연삼	이병기	전준권	최현	박효민	고광호	김강문	양시경	김기완	신영철	정병인
권경자	김우경	박석민	심정순	이병철	정기호	최해자	성치원	고세창	김경용	양우선	김기태	안주형	정성진
권남구	김원화	박선홍	심현창	이상동	정낙식	한기남	송약용	김선일	김남혁	양효진	김길년	양경모	정진선
권오연	김윤식	박성인	심현열	이상영	정두용	한만송	안수현	김용복	김동욱	오승용	김명호	양승조	정하진
권우한	김윤태	박수영	배관우(주) 박영희	이상훈	정미경	한창원	안정훈	김용철	김동진	오영익	김민수	엄금자	조영주
권정호	김은경	박순옥	안동찬	이상한	정석환	함지현	양창훈	김은정	김명준	오정훈	김미경	오세훈	조하식
김강봉	김은영	박시우	안병준	이애경	정선오	함창학	엄상섭	김을수	김봉석	오종선	김미수	오수균	주진혁
김경태	김응철	박옥희	안재균	이연숙	정승연	허도병	오상현	김일중	김봉철	유덕현	김봉미	오승화	최석남
김경호	김민수	박용해	안희섭	이영권	정연중	허명한	유창엽	김재오	김석	유두석	김상관	오인철	최장은



하종률	김경호	김수정	김종태	라운애	박인환	성현용	안병대	오훈영	이경수	이승준	이현식	정문섭	조울선
한광수	김계옥	김수환	김주복	류규식	박재경	소순창	안영숙	오희	이경순	이연옥	이현주	정미화	조일원
한문식	김관식	김승호	김준년	류근모	박재관	손세원	안윤숙	이상동	이경희	이영로	이형각	정병숙	조장식
한형규	김광남	김애영	김준봉	류근윤	박재익	손윤희	안창현	우장명	이광식	이영숙	이형우	정상섭	조종호
허종일	김광복	김양식	김준수	류덕환	박정연	손정훈	안중태	원광희	이광용	이영진	이혜정	정상신	조진희
황규훈	김광성	김연식	김준태	류연옥	박종국	손효진	안창만	유경훈	이광희	이영희	이효상	정상완	조창영
황중헌	김광직	김영근	김지연	류용걸	박종룡	손희준	안창현	유광선	이귀숙	이유정	이화련	정성래	조창진
황천순	김광희	김영란	김진철	류우열	박종을	송광희	안태희	유광식	이귀형	이윤범	이효숙	정성희	조형규
황한철	김교선	김영란	김창석	류재욱	박지영	송길화	양계인	유국열	이규선	이은숙	임근철	정수창	주서택
	김규설	김영민	김천시	류재형	박진우	송미애	양기정	유근수	이규진	이인우	임근수	정순배	주해리(주)주주
	김규원	김영배	김춘희	류지봉	박철규	송선호	양미선	유미숙	이기정	이일만	임기중	정연경	주식회사 팜필리아
청주경찰서	김기영	김영식	김태성	류진호	박철석	송은숙	양승주	유민상	이길재	이일우	임노열	정영래	주재규
	김길후	김영재	김태성	류찬걸	박철완	송의천	양영순	유민채	이길환	이장희	임동현	정영섭	주재현
(주)세일	김남균	김영태	김태희	류학천	박해순	송일근	양원철	유선우	이대응	이재덕	임미애	정영희	주창백
(주)중부컴퍼니	김남진	김영호	김평환	류현숙	박현순	송재경	양찬섭	유성훈	이도영	이재숙	임병락	정우성	지동규
강인오	김대광	김영환	김필재	리드산업(주)	박호표	송재규	양경출	유순영	이동로	이재영	임성총	정은경	지유석
강병호	김대웅	김영환	김학구	마재광	박희분	송재봉	양승용	유승덕	이동진	이재영	임승빈	정은희	진중헌
강석형	김대중	김영희	김학실	맹석주	박희자	송재창	예듀크리안트	유시송	이두영	이재원	임용현	정인수	차은녀
강성래	김대환	김완희	김한솔	맹현숙	반영운	송태성	여영수	유영경	이만형	이재은	임은정	정일기	채희관
강승구	김동수	김용규	김현상	명정희	반주현	송태화	연규순	유영숙	이만희	이재춘	임재규	정일택	정남영(주)세일
강은희	김동암	김용덕	김현주	문성오	방현철	송해근	연규용	유영아	이명숙	이재현	임중승	정장영	정혜영(주)세일
강진성	김동욱	김용석	김현진	문종국	배병기	송효현	연병희	유응모	이명순	이정규	임차남	정재량	정선영(주)세일
강현구	김동일	김용태	김형규	문희창	배봉준	신국희	연영규	유재남	이영호	이정석	임한빈	정지성	최각규
강호승	김동진	김용학	김형우	민경억	백미경	신규식	연영태	유재일	이영훈	이정수	임한수	정지영	최경천
경준용	김동현	김용규	김혜숙	민선희	백승협	신동선	연인하	유창범	이미경	이정아	임현경	정진아	최경호
고성돈	김두호	김원식	김호숙	민승기	법무법 주성	신동예	연철흠	유철호	이미순	이정협	임희영	정진원	최명섭
고영구	김달숙	김유정	김호일	민청식	변만수	신명섭	염경수	유충욱	이민영	이중수	장경석	정진하	최상범
공공디자인이즘	김영수	김유호	김홍구	박관주	민수	신명수	염우	유행열	이범석	이종실	장남운	정찬영	최상영
곽규은	김영자	김유묘	김홍성	박광수	변상호	신명숙	은식	유현덕	이병관	이종윤	장동대	정철	최상천
곽덕신	김문옥	김윤정	김한국	박금순	변성민	신성길	오경아	유환철	이병호	이종한	장병순	정충선	최상희
곽승호	김미숙	김은옥	김황래	박기환	변은영	신성일	오국진	육미선	이복순	이주봉	장병희	정태진	최상희
구남휘	김미연	김용철	김효일	박남순	변의수	신승주	오명진	육종길	이상규	이주선	장선배	정현순	최영중
구병희	김민호	김인숙	김희수	박문희	변장섭	신영창	오명환	윤건영	이상식	이주형	장영건	정희승	최용찬
구안서	김병우	김인자	김희숙	박미애	변필섭	신영희	오미정	윤관수	이상정	이준수	장재봉	조경주	최우식
권경미	김병의	김일경	나채경	박미영	봉원진	신용재	오병건	윤미정	이상중	이준희	장홍래	조경주	최원침
권기승	김봉주	김일복	남기상	박범혁	봉윤근	신용한	오상록	윤병선	이석구	이중섭	장홍원	조규완	최원호
권미경	김상무	김재복	남성욱	박석현	서건석	신철영	오석송	윤병희	이석호	이중현	전광호	조규호	최윤정
권성안	김상수	김재숙	남윤빈	박성순	서길용	신태경	오세란	윤석위	이석희	이중훈	전금희	조동순	최은실
권수복	김선영	김재춘	남중순	박성호	서미화	신해운	오세봉	윤송현	이선미	이지숙	전길자	조동욱	최익완
권영기	김선희	김재학	네모트 마프구	박세복	서완석	신현규	오연경	윤여일	이선순	이지영	전년규	조상현	최재일
권오건	김성민	김정문	노근호	박세웅	서울고속(주)	신현식	오영미	윤정수	이선우	이차영	전병선	조성구	최종문
권은은	김성수	김정웅	노만균	박연수	서준철	신희숙	오영애	윤진현	이상우	이찬호	전용렬	조성오	최종예
권태성	김성식	김정일	노재량	박영미	서효석	심규석	오영필	윤찬열	이수복	이창록	전용표	조수중	최종익
김강용	김성중	김정초	노진호	박영순	석명용	심상학	오윤주	윤태한	이수영	이철중	전우석	조승연	최중현
김강일	김성천	김종구	대인(주)대인(주)대인(주)	박용연	선종열	심서현	오재만	윤한식	이수한	이철희	전창해	조영화	최진욱
김건도	김성호	김종기	도경민	박은경	선지연	심수영	오종영	윤현우	이순남	이한례	전형천	조용숙	최진완
김건일	김성희	김종철	도선봉	박익규	설경철	심영미	오준영	윤호영	이순호	이해승	전희택	조원주	최홍진
김경자	김송일	김종철	도승기	박인숙	성기남	심재원	오태경	이가빈	이승배	이항숙	정길재	조윤행	최태호
김경자	김수열	김종태	두개비(주)농업조합	박인자	성창기	씨투넷(주)	오태진	이건철	이승준	이현수	정란희	조은애	최현숙

최형도	한승환	함참모	홍성학	황선건	고태규	김진상	박형일	신선철	윤학로	임재선	조성모	허영준
최호균	한연수	허석렬	홍성학	황성주	권용범	김찬중	방명열	안호춘	이관행	전규호	조성자	허장현
표한홍	한영선	허성만	홍승표	황종빈	김정숙	김한택	방수진	양태식	이복연	전근우	진창철	허중영
풍경섭	한원영	허영	홍우표	황희연	김광배	남형우	변용환	윤준형	이상섭	전만식	최규만	황덕호
하옥란	한인섭	허창원	홍응표		김남철	박강욱	변좌용	유재원	이석원	전미연	최희수	황해숙
하태종	한정현	현상주	홍호승		김대영	박경철	석영기	윤장혁	이승준	전성휘	춘천상공회의소	
한범덕	한중실	현진	황경수	춘천경실련	김석중	박도수	손현기	윤재경	이원규	전호성	하상준	
한상화	함영욱	형석임	황락훈		김영준	박미현	손흥주	윤재선	이인섭	정의성	한희민	
한성원	함중철	홍강희	황미화	고광수	김정현	박상규	송창근	윤진현	이희창	정휘돈	함태성	

중앙경실련

기획연대국	02-766-5626	국장: 노건형, 간사: 최윤석	(사)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국장: 남은경
회원미디어국	02-766-5627-8	국장: 채준하, 간사: 윤은주, 이성윤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4144	국장: 권오인
30주년사업국	02-766-5629	국장: 김삼수, 팀장: 정택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간사: 조성훈
정책실	02-3673-2141-2,5	실장: 윤철한, 팀장: 최예지, 간사: 조성훈, 서휘원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실장: 윤철한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4	국장: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정호철, 김건희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실장: 윤철한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국장: 김성달, 팀장: 최송섭, 간사: 장성현	월간 경실련	02-766-5627	이사: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고영삼, 간사: 박항미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유영아 간사: 김미진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서해림 갈등센터 국장: 김원숙, 협동사무국장: 김창근	거제경실련	055-637-9451	간사: 배동주
부산경실련	051-761-3951	사무처장대행: 도한영, 팀장: 안일규, 간사: 한가희, 김세윤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국장: 김성아, 팀장: 정지은	전라·제주권		
경기·강원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고선휘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여수경실련	061-643-2110	간사: 최진숙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간사: 김정숙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전원신
군포경실련	031-392-3111	부장: 황은아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수원경실련	031-253-2266	국장: 유병욱, 간사: 문은정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최수진, 사무차장: 강형민, 간사: 고통우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간사: 허경미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김은정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규숙	제주경실련	064-726-2530	팀장: 김은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주상운, 간사: 변정해			
양평경실련	031-772-7199	국장: 여현정, 간사: 김은미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현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미정			
춘천경실련	033-241-9486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